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2025. 12. 5.) 속기록(의결본)

발언자	의결본(최종)
주은선위원장	지금부터 연금특위 자문위 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처음 참석하신 위원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지난번에 인사하셨던 분들은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헌재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죠.
송헌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입니다. 지난번에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많이 배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선위원장	원종현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종현 위원	예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참석을 못했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반드시 여러번 꼭 참석해서 조금 만이라도 제가 자문위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선위원장	정창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정창률 위원	1기에 참여했었는데요. 2기는 그보다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일단 회의 시작하면 항상 지난번 회의록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번에는 회의록 관련된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발제와 토의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데요. 두 분 위원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승룡 위원님과 정세은 위원님 두 분이신데요. 먼저 신승룡 위원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신승룡 위원	예 신승룡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에 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상상태 보험료율에 대한 건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전히 국민연금법 개정을 했지만, 기금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수입이 아직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그겁니다. 저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 일단, 기금 운용수익률이 4.5%일 때는 기금 고갈이 2064년, 그리고 만약에 기금 운용수익률을 5.5%로 가정을 하면 2071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발언자	의결본(최종)
	<p>나와 있는 상황입니다.</p> <p>그리고 기금이 고갈되고 난다면은 보험료율이 최대 39.2%까지 오를 수 있고, 그리고 2093년에는 33.6%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현재는 9%고 2033년에 보험료율이 13%인데 그것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1%p도 올리기 힘든 상황인데 과연 35% 이렇게 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이제 연금 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있는지 다양한 보험료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만이 기금 고갈을 항구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4차 재정계산입니다. 왜 4차 재정계산을 보여드리냐면, 이 아름다운 그림을 5차 재정계산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볼 수 없는지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20.2%를 해야 이렇게 기금이 마지막에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마 고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p> <p>지금 추계 기간이 70년밖에 안 돼가지고 볼 수가 없으나, 특히 적립배율 1배 필요보험율, 범위 맨 아래 있는 줄이죠. 보험료율이 16.02%일 때인데 거의 추계기간이 끝나자마자 아마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이거를, 이만큼의 연금 수입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p> <p>왜 다른 보험료율은 다 고갈이 되는지? 생각보다 이 연금재정은 모 아니면 도인 상황입니다. 항구적으로 기금 고갈을 방지하는 필요충분조건이에요. 그냥 간단한 수학인데요. 지출이 수입+적립금보다 더 작거나 작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기금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기준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등식 왼쪽과 오른쪽이 같게 만드는 보험료율을 저희는 정상상태 보험료율이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은 정상상태 보험료율의 대리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만약에 보험료율이 정상상태 보험료율과 일치하면 그림처럼 영원히 기금이 지속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낮으면 기금 고갈이 확정입니다. 물론 100원어치 낮다 그러면 좀 고갈이 늦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금은 고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기금 고갈은 모 아니면 도. 그래서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요보험료율을 충족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매우 높아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이 정상상태 보험료율보다 더 낮을 경우 정상상태 보험료율은 계속 커집니다. 어디까지 커지냐 그러면, 기금 고갈 후에 보험료율, 아까 39%보셨는데 거기까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금 고갈 후에 정상상태 보험료율을 바로 부과방식 필요 보험료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과거에도 역시나 이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은 3차 재정계산 때, 2013년에는 15.8%, 그리고 4차 재정계산 때는 20.2%, 5차 때는 20.8%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p> <p>지금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서 그만큼 돈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보다 과연 더 많은 돈이 생길까? 아마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위주의 논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알아야 앞으로 국고 투입을 얼마나 할지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모릅니다.</p> <p>일단 5차 재정계산 때는 보고가 됐습니다. 20.8%로 보고가 됐고. 그런데 소득대체율이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43%로. 그래서 이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기금 운용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이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것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번 회의 끝나자마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자료를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p> <p>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대신에 적립배율 1배 필요보험료율을 주신 상황인데, 아까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금이 무조건 고갈되는 그런 보험료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받았냐면,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지는 시나리오 여러 건에 대해서, 지원 최대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은 3차, 4차, 5차 재정계산 때 이미 보고되고 있는 그런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p> <p>신구연금 분리안, 두 번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정상상태 보험료율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보다 이거를 부담할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걸 부담하지 않아도 그 피해는 저희 몫이 아니라 미래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p> <p>그 증거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보험료율은 9%로 계속 되었었고 올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만 정상상태 보험료율 역시나 올리고 말았습니다.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할 유인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인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제기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p> <p>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상상태 보험료율 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 피해는 현세대가 감당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는 이 정상상태 보험료율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인책을 보냐? 일단 간략하게 좀 이론을 설명드리자면, 이 정상상태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정확히 손익분기 보험료율과 미적립부채 부담 보험료율로 정확히 나눕니다. 여기서 미적립부채라고 말하는 거는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 미적립부채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연금 약속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는, 과거에 이미 보험료 납부한 것 그것에서 발생한 연금 급여 약속의 현재 가치에서 적립금을 뺀 게 바로 미래 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 미적립부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p> <p>이게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고서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가치로 1691조 원. 그리고 보험료율로 환산한 액수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93년까지 보험료율 6.6%p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 그 정도가 이제 미적립부채 부담 보험료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손익분기 보험료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익분기 보험료율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으로 보험료를 사람들이 내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약속 받은 연금 급여 약속.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받을 만큼 내는 보험료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대수익비=1 보험료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비는 당연히 기금 운용수익률로 할인하는 그런 개념인데요.</p> <p>이 특징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미적립부채가 없다면 이 손익분기 보험료율만 내도 앞으로 약속된 연금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준 그 숫자만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5차 재정계산 때는 15.9%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p>

발언자	의결본(최종)
	<p>튼 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인데. 이제 신규연금 분리라는 것은 구연금에서 난 이 재원을 미적립부채 부담 보험료율과 적립금으로 하고, 신연금의 재원은 이 손익분기 보험료율로 하자라는 것이고. 구연금에서 과거 보험료 납부에 의해 발생한 연금 급여 약속을 이행하고, 그 재원은, 이 미적립부채 재원은 국고 투입으로 하자라는 것이 그 골자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 국고 투입이 미적립부채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약속 연금 급여의 약속을 파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p> <p>신연금은 이제 미래 보험료 납부에 의해서 발생할 연금 급여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만약에 손익분기 보험료율 만큼의 보험료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 급여가 좀 삭감이 돼야 하겠습니다. 기대수익비=1에 맞춰서. 낸 만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신연금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p> <p>많은 분들이 이 신규연금 분리안이 DC형 연금이다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KDI에서는 민영화나 개인계좌제를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공적 연금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이나 수명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국민 연금이.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왕 있는 거 뭐 하러 없앴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투자 규모가 매우 큼니다. 그리고 세계 혜택도 있어서 그런 혜택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p> <p>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민연금은 극단적으로 DB형입니다. 노후소득보장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자동조정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지급 상황을 적기에 시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17년간 어떤 개혁도 진행되지 못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기때문에 각 세대가 기기대 수익비=1이 되도록 낸 만큼 받도록 적절한 자동조정장치가 있어야 이렇게 항구적으로 이제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세대 내에서 재분배하도록 하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칠레 연금이 실패했다. 그래서 신규연금 분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연구원 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해외 실패 사례라고 하면서 칠레 사례를 거론을 했고,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전환비용이라고 적어놨</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습니다. GDP 대비 4%가 넘는.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비용은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월드뱅크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50년까지 정부 부담금이 개혁 전에는 GDP 대비 177%였으나 전환 후에는 74%로 줄었다는 겁니다. 74%로 줄어서 칠레가 매우 행복해졌더라는 건 절대 아니구요. 칠레 연금개혁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민영화, 개인계좌제, 보험료율 인하로 인해서 연금 급여가 줄어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주요 부작용의 원인은 전환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플러스.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1980년 합계출산율이 2.74였는데 현재 2023년에 1.17명입니다. 과연 칠레 국민이 현재, 부과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을지 생각해 보고, 좀 실패인지 아닌지 결론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p> <p>아무튼 제가 칠레 연금을 주장하는 건 아니구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지금 신규연금 분리가 그걸 이룰 수 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미적립부채와 손익분기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끝나자마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역시나 제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미적립부채를 알면 곧바로 손익분기...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을 알면 곧바로 손익분기 보험료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뻔셈을 하면 되는 건데, 어느 쪽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미적립부채 계산하기 위한 보고서를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숫자는 안 주셨는데 그림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수작업으로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를 제가 다 좀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보고한 거는 뭐냐면 미적립부채가 1691조 원이다. 근데 여기에서 계산한 건 1662조 원. 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p> <p>그리고 보험료율로 하면 6.6%이라고 했는데 저는 6.8%이여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나고. 또 GDP 대비로 연간 1.8%라고 했는데 그건 정확히 맞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금 운용수익별로 미적립부채를 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운용수익률 5.5%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보셨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미적립부채가 줄어듭니다. 1271.9조 원이고 이걸 연간 GDP 대비 얼마 만큼의 국고 투입이냐라고 하면 그게 GDP 대비 1.1%의 국고 투입입니다. 할 만 하다라고 하실 분도 있고, 여전히 크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 운용수익률이 오르면 미적립부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와 수학적으로 틀린 주장을 하십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도 이런 주장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구연금의 전환비용 그게 1700조 원으로 너무 커서 신규연금 분리는 반대한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4.5%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기금 운용수익률을 5.5%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려면, 저기 미적립부채를 1270조 원 또는 GDP 대비 1.1%라고 주장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좀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적립부채를 내고 싶지 않은 건 이해합니다.</p> <p>그리고 현행 제도 유지를 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걸 둘 다 실시하면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 전환비용을 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기금은 고갈이 되고, 그런데 기금 고갈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도 전환비용을 내지 않는 거니까 매우 큰 연금 삭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저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상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이제 미적립부채에서 자꾸 커지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저 그림이 맞다면 만약에 맞다면, 기금이 고갈되고 나서 전환비용을 내지 않으면 연금이 50% 정도 삭감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p> <p>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전환비용을 내지 않고 재정을 안정화시킨다? 그림에서는 저 빨간 부분이 4분의 1 정도지만 4분의 1을 줄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금이 있고 기금 운용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만큼 줄일 필요가 없다. 확실한 거는 이제 전환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금 고갈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연금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을, 연금을 줄이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5.5% 이상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기 저는 저기 원종현 위원님 믿습니다. 그래서 6%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양한 낙관론이 있습니다. 7%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낙관론을 주장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뭘로? 자동조정장치로. 현세대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국회 인가 없이 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p> <p>지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회의 후에 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중립 기금 운용수익률을 정하고 앞으로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도 매번 매번 정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에는 기금 운용수익이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높일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기준점은 뭐냐 하면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돼야 합니다. 정상상태 보험료율 만큼의 연금 수입이 확보가 되도록 연금 수준을 조정해야 됩니다.</p> <p>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지균형 보험료율, 적립배율 1배 필요보험료율, 개방집단방식 미적립부채 이런 거를 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재정안정에, 안정의 어떠한 시사점도 제공하지 않은 그런 지표라서 탈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어떤 상황이나. 보험료율이 정상상태 보험료율에 크게 미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비상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방치한 탓에 비상상황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보험료율 인상, 국고 투입, 수급개시 연령 상향. 이런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실 골자이고, 이거는 신연금이든 구연금이든, 기금 분리를 하지 않아서 현행 유지를 하든,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이번 민간자문위를 통해서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p> <p>그런데 과연 이루어질까? 일단 기금 운용수익률이 6.5%여도 기금이 고갈된다고 NABO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현재 저희 현세대는 이거를 비상사태로 보긴 할지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는 전혀 엉뚱한 지표를 위주로 보고를 하고 있고, 18년간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고, 최근에도 정상상태 보험료율은 오른 상황. 그리고 국고 투입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연금특위에서는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36년부터 투입하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2036년 가서는 2046년에 투입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극적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냥 자동조정장치가 지금 있다 그러면 기금 안정은 아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투입 없이 자동조정장치를 실시하면 연금 삭감은 불가피하고 그러면 고령층의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p> <p>다만 만약에 국고 투입과 자동조정장치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신구연금 분리는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신구연금 분리는 어쨌든 지금 현행에서 개혁하는 것과 다르긴 합니다. 가장 다른 건 뭐냐면 국고 투입을 하든 안하든 장기적인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이룬다라는 점</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이 있고요. 왜냐하면 국고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보는 건 현세대이고, 장기적인 연금은 별로 신연금은 피해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국고 투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현세대 이익으로 이렇게 엮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여 국고 투입이 굉장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애초에 신규연금 분리. 그것도 어렵습니다.</p> <p>여기에서 아까 절반 위원님들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전부다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애초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연금 분리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창근 교수님이 설문조사한 겁니다. 생각보다 국민분들이 좋게 바라보고, 그걸 좋게 바라보는 건 생각보다 젊은 세대가 아니라 50대, 60대, 40대. 20대 찬성 비율은 49.7%, 50대 찬성 비율이 57.7%. 그리고 반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다. 민주당 지지자 찬성 비율 57.7%, 국민의힘 지지자 찬성 비율 56.5%. 진보 지지층도 중장년, 고령층 지지층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회 지도층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왜 민주당 쪽에서 초대를 받지 못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p> <p>이것과 일관성 있는 다른 결과도 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인데 전체의 70%가 동의한다라고 했다. 전 연령대에 비슷한 높은 동의 비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투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신규연금 분리 같은 건 필요 없겠지만, 그리고 그걸 위해 저는 여기에서는 노력하겠지만, 역시나 좌절된다하면 어쩔 수 없이 저 분리안을 주장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정세은 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25분으로.
정세은위원	<p>저는 한 5개 정도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장 대안으로서 많이 논의가 되는 보험료 급증과 급여 삭감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재정인데 오타났네요. 기금수익률과 장기재정 재추계가 좀 필요하고, 그 하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로 보겠습니다.</p> <p>장기재정 전망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초저출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을 전망 때문이고, 이것이 경제활동인구를 저렇게 쭉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인구감소에 더해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자본축적률 둔화도 가정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2040년대에 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도 둔화되기 때문에 미래의 고령층 부양이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안 썼지만, 이거는 GDP 전체가 0%대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이 앞부분에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1인당 경제성장률은 1.9%, 2%로 계속, 성장을 계속해요. 그래서 미래의 생산인구는, 계속 평균적으로는 계속 삶이 나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부담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나중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만 하고 나중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p> <p>이게 모수개혁 전에 제5차 재정계산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밑에 파란색 막대기. 저게 급여지급을 위한 총지출이거든요. 이걸 GDP 대비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녹색이 보험료 수입이거든요? 기금이 원래는 53년에, 모수개혁 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보면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이나 기금을 털어 쓰는 거나, 그걸 다 털어 쓰면. 사실은 2053년까지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지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을 털어다 쓰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 갑자기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나는 저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만약에 저거를 다 빚으로 때운다면, 저걸 다 모아서 현재가치로 한다면, 그게 이제 미적립부채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p> <p>그래서 우리들은 연구자들이니까 그 의미를 다 아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미적립부채라고 하면은 지금 마치 부채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미래에 있는 걸 현재 가치화해서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래에 GDP 대비 여기 딱 보시면은요. GDP 대비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 6%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해 6%를, 왜 6%인지? 아무튼 저 계산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매해 6%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를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게 여기 이제 우리 재정 불안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p> <p>근데 만약에 이 부과방식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아시겠지만 현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고갈된 이후에 다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부과해야 할 것이냐, 그게 30%, 35%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던</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것처럼, 만약에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쪽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적립배율 1배부터 일정한 적립배율. 저기 보시면은 14.8%이어서 상당히 많은 거여서. 아까 보면은 GDP 한 150%의 기금을 쌓아야 되는 건데, 17%부터 20.77%까지 급증을 시켜야 되는 거죠.</p> <p>그게 이제, 저게 첫 번째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도 어렵고 사실은 이 두 번째도 어려운 얘기에요. 그쵸? 첫 번째 기금 고갈된 다음에 35% 올린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쉽냐? 당장 18%로 올린다는 게 쉽냐? 최근에 저희가 13%로 보험료를 올렸는데, 당분간 이것도 지금부터 33년까지 올린다는 건데, 이거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나온 거고, 소득대체율 올린 다음에 나온 거여서. 사람마다 가능하다, 더 올리는 게 가능하다 안 하다는 거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그럴 용의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둘 다 쉽지 않은 문제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p> <p>올해 이번에 25년이라고 해서, 20이 빠졌는데요. 올해 있었던 모수개혁인데, 모수개혁이 당연히 소득대체율을 올렸기 때문에 GDP 대비 급여지출이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개혁 전에는 파란색 라인이었는데요. 개혁 후에는 저렇게 주황색 라인으로 올라서. 재미있는 거는 2050년에서 55년 사이에 살짝 줄어들더라고요. 저거 인구구조나 뭐 때문에 줄어드나 궁금하던데,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빼면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보시면은 2090년, 그 뒤에 연도가 약간 좀 하나가 추가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근데 이제 저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미래 세대라고 하는 미래 세대도. MZ세대의 노령일까요? 거기서 많이 도움이 된다. 소득대체율 개선하는 거는. 특히 이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가서 더 많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도 개선이 됩니다. 많이 얘기됐듯이, 원래는 53년에 고갈이 되어야 하는데요. 65년인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 뒤로 미뤄지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적자예요. 적자는 그 전부터 나가거든요? 파란, 녹색은 개혁 전에 적자이고요. 주황색은 개혁 후에 적자거든요?</p> <p>근데 고갈되기 전까지는 적자가 발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을 털어서 그걸 메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뒤로 한 10년 늦춰지는 건 다행이다. 그리고 기금 고갈 이후에 주황색을 보시면은, 녹색선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수지도 약간 감소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는 거는, 그래서 개선된 면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는 것은, 고갈된 다음에 저 주황색 선 밑에 적자 부분이 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야죠. 대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에 이제 요 앞으로 돌아오면, 여기에서 파란색 GDP 대비로 한다면, GDP가 비슷한 전망이라고 친다면은, GDP 대비로 파란색이 약간 떨어지겠죠? 그래서 GDP 대비 격차는 약간 줄어 들 것 같습니다.</p> <p>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급증시키고 급여 삭감을 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수 있냐?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급여 삭감도 가능한 일이나? 예를 들면, 저기 재정계산 전이에요. 이거 반영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건데요. 은퇴인구 1인당 급여액이 미래 생산인구 1인당 소득의 항상 25%예요. 25%여서. 우리 지금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먼 미래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요. 먼 미래의 노인이 됐을 때 국민연금은, 평균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격차가 있는 거니까. 평균으로 보면은 은퇴한 다음에 국민연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평균 임금의 한 25%여 가지고, 미래에도 진짜 최소한이다. 이거를 더 깎을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럼 국민연금만이지, 딴 거 다 합치면 많지 않냐?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다 포함해서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를 보시면은, 지금의 OECD 국가들하고 비슷한데, 2060년에 가도 우리가 좀 많아지긴 하는데, 2060년에 한국이 정말 고령화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적연금이 약화가 되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재정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빈곤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적연금이 그것을 감당해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공공부조라든지, 지금 있는 최저 뭐죠? 취약계층을 위한. 어차피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공적연금이 해줘야 한다.</p> <p>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현재의 공적연금의 기본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더 낮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정말, 이걸 가지고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동삭감장치를, 아주 많이 내는,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는 깎는 거? 그건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평균이나 그 이하부터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싶고. 근데 위에도 깎기가 쉬울 것이냐? 위에는 지금도 많이 낸다고, 내는 거에 비해 절반도,,, 그건 잘 한번 계산을 해 보시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참 깎기는 어려울 것이다.</p> <p>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논의를 할 때 지금 장기재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기본적인</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딱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재정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70년 후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특히 기금수익률 전망을 4.5%로, 계속 4.5%로 했거든요? 이것은 좀 많이 바뀌어야, 이걸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5.5% 정도는 올라야 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지만 AI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5% 아니면 6.5%. 제가 당장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걸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싶고. 미래까지도 6.5%가 가능하냐? 이걸 어렵겠지만, 한 10년, 20년 이 정도는 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70년을 거의 일직선으로 그어 봤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근거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재추정하게 되면요. 예정처에서 최근에 추정한 것인데, 다들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1%p. 그러니까 5.5%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기금 소진 시기가 2073년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2073년이면은 지금이 2025년이니까 거의 50년 후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0년 동안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에서는, 그 정도 하에서는 아무런 걱정은 없다. 사실은 이런 것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을 붙였지만. 큰 걱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p> <p>혹시 기금을 운용, 기금수익률이 6.5%가 난다면은 기금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아주 밀리거든요? 2090년이 그럼 지금부터 얼마 후냐라고 하면, 한 2,3세대가 지나는 시기여가지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예를 들어 국고 투입을 0.2%만 쭉 해도 그냥 이 계산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기금이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거기에 기금에서 나오는 그 수익만으로도 GDP 한 6% 정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급박하게 지금 당장 깎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재추계를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봐야 한다. 여유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그다음에 다양한 국민연금 수입 확대 방안도 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건 국고 투입이 1순위인 것 같아요. 국고 투입.</p> <p>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당장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지만, 2033년 지난 다음에 보험료가 조금 완만한, 조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것 말고도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다들,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나이에 0.8 곱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거 70세까지 일하고 싶다. 저는 지금부터 50년 사이에 분명히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금 수령 일시 나이가 다 조정이 될 거다. 그걸 지금의 60세, 65세로 고정시켜놓고 이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너무 그렇다.</p> <p>우리가 당장 지금 올리자는 건 아닌데요. 진짜 70년이면 지금부터 50년 사이인데,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 정도는 뒤로 미뤄져요. 그래서 이 계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연금 수령연령 상향, 이것만 돼도 저는 이걸 미래의 GDP 6% 정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 제가 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국고 투입 적어도 국고 투입이나, 3년 정도 연장과 연동한 연령 수령, 연령 상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미래에 70년 후에 여전히 GDP 대비 6%의 적자가 날까?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이것을 다시 해보길 말씀드립니다.</p> <p>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국고 투입의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자주 자동안정장치를 얘기하는 거는, 어떤 선입견이, 생각이 있는 거냐면은, 지금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렵다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려운 거냐. 이거는 1962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여기 원종현, 박나리 박사님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것을 한번 저희가 양쪽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p> <p>62년생부터 92년생까지 평균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오래 갈수록 국민연금은 이득인 거잖아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균적인 수명을 가진 평균적인 임금 조건이나 여러 사람을, 평균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 보면 저까만색이거든요. 까만색이에요. 근데 지난 1988년부터 30년간 국민연금이 낸 평균 수익률이 6%보다 조금 높은 6.27%인가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앞부분에 62년생부터 72년생까지는 좀 더 받네? 이럴 수 있지만, 저 때에는 국민연금이 저수익을 주는 공적자금에 투입됐기 때문에 원래는 더 높았어야 돼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앞부분에 62년부터 한 90년까지는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p> <p>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거는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선 세대,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 국민연금을 저수익 공적자금에 많이 투입해서 그때의 수익을 뽑아내지 못한 거. 그때 수익을 제대로 뽑아가지고 기금 운용을 했으면 지금 기금이 훨씬 많아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못했다. 여러 가지.</p> <p>그런데 국가가 국민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했던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국가적인 정책 목적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이 뒷부분에 92년생이나 아니면 계산이 안 됐지만 2000년생이나,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이 6%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미래 세대의 수익률이 훨씬 조정이 되어야 하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나 이세대에는, 저는 현재 계산에 따르면 내는 만큼은 가져간다.</p> <p>자꾸 지금 은퇴에 들어가는 베이비부머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러한 그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맞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2008년에 개혁을 많이 해서 지금은 내는 만큼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지났으니까 아직 좀 5분 정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 불안정 문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p> <p>처음에, 초기 보험료 수입을,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미적립부채하고 좀 맞지 않나 뒤에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맞닿을 텐데, 초기 보험료 수입을 저수익 공적자금을 활용한 것이, 국가가 수입을 줄였던 하나의 원인이다.</p> <p>둘째는 산업화 세대가 예상하지 못하게 기대여명이 증가했어요. 원래 처음에 국민연금 설계할 때에 기대여명을 75세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90세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갔던 그게 다 지출이 되고, 그거를 그대로 그게 안 나가고 계속 쌓였으면 아마 기금 수입이 지금 훨씬 많았을 텐데 그게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p> <p>그다음에 세 번째는 크레딧 제도 운용인데, 이걸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국민연금이 떠안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걸 보험료로만 해야 되느냐. 또 하나 여기서 현재는 이 보험료 수입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은퇴 인구의 근로소득에게만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가를 보면은, GDP에 보면 고정자본소모, 자본소득, 피용자보수가 있는데, 피용자보수에서도 한 30%, 여기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요새 90, 80세 뭐 이렇게 돼도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리 이경규 같은 분들도 오래 일하죠. 근데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오래 일하는 분들의 근로소득이 제대로 여기에 기여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p> <p>저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정 불안정 문제가 책임이 국가에 있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국가는 누구냐? 국가는 바로 국민 전체이고, 우리 국민 전체는 어떤 한 시점의 국민이 아니라, 그 후손 많은 세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후손들이 국고 투입을 통해서 같이 나눠야 하고, 그 국고 투입에는 여기 보시면 현세대, 미래 세대, 근로소득자, 자본소득자 모두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 투입이 상당히 이거는 공정하다. 현재의 부담 방식은 불공정하다. 비은퇴 인구의 근로소득에만.</p> <p>그럼 미래에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일하는 사람이 적는데, 그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에만 왕창 부과하니깐 미래에 필요보험료율이 35%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줘야 한다. 국고 투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U 국가들도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연금 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ECD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세 가능하다. 국고 투입, 아까 말씀하신 GDP 조금만 넣으면 돼요. 앞으로 한 50년 70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 한 0.2%, 0.3%에서 쪽 하면은 저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p> <p>두 번째 완만한 보험료 추가 인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3%까지 33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는 13%까지 내고 미래 세대가 15%, 18%까지, 18%가 너무 높다면 15%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5% 내는 것은 그러면 그게 형평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많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 자본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성장하기 때문에, 전체 GDP는 0%대로 가지만 1인당 GDP는 1.9%로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지금 능력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산업화 세대의 3% 보다 우리가 9%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인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지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쪽 올라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얘기 했고요.</p> <p>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9%, 13%, 43% 하더라도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이 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이익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수익률이 5.5%, 6.5%에서 쪽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서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는 거는, 저건 정말 당연하다. 똑같이 부담하는 거 가지고 세대 간 형평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그건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죠.</p> <p>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바뀔 제도가 많다. 여성의 경활율과 고용률 제고, 건강한 고령층 확대, 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축적률 제고, 중장기 출산율 제고.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불확실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통계로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다시 하면 저건 분명히 바뀌어요.</p> <p>오케이 넘어가서. 많은 선진국에서 특히 덴마크는 벌써 73세, 74세까지 Pensable Age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p> <p>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은 첫째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상태를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 재추계, 그래서 50년 후 70년 후 발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추계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50년 후 혹은 70년 후에 발생할 GDP 대비 6%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는 문제로 좀 바뀐다.</p> <p>두 번째는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있는데, 그 효과를 좀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 국고 투입을 하더라도 언제 투입하나, 수입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초반에 많이 투입하면 조금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또 돈이 낡고 해서 나중에 충분해지겠죠.</p> <p>그런데 이제 단지, 지금 현세대가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공정하냐? 아까 제가 내는 만큼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공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따져봐야 된다.</p> <p>그다음에 보험료를 추가 인상도 2033년도에 조금 조금 할 때 나중에 어떤 기금 정도가 남을 것이냐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나 고령층의 경활율 증가 이런 거, 사회경제 제도의 변화 이런 것도 다 넣어야 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 이렇게 미래를 얘</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기하기 때문에 훨씬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p> <p>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미래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느 한쪽은 기금을 대규모로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느 한쪽은 미래의 약간 부과식 비슷한 부분 적립식으로 가면 된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부과식 비슷한 적립식, 기금을 적립배율 1배 정도로 가면 된다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해요.</p> <p>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 일하는 나이가 위로 연장되고, 보험료를 조금, 국고를 조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조금씩만 하면은 그때의 6%, 그때는 적자 6%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논의를 해야 돼요. 기금을 많이 쌓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그냥 넣을 거냐 아니면, 기금을 그렇게 쌓지 않고 그때의 정상적인 수익을 가지고 할 거냐.</p> <p>그래서 4번은 이렇게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게 초반에 논의가 브레인스토밍이고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주장이 따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찍 끝내주셨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두 분 발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 응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일단 두 개씩 묶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질문 시작해 주시죠. 원종현 박사님이랑 김학주 위원님. 김학주 위원님부터
김학주위원	<p>네, 저는 정세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원종현 박사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메일로. 미적립부채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p> <p>우선은 정세은 교수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15페이지, 기금수익률 재정전망 채주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6%에서 9%까지 2090년까지 계속 상승하는 선형, 점선이 있습니다.</p> <p>실제운용수익률이라고 괄호 안에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렇다면 자동조정장치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률 전망이 좋다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p>

발언자	의결본(최종)
	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장치인데.
정 세 은 위 원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김 학 주 위 원	아니 왜냐하면 자동조정장치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9%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논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 기금 손실이 생겨서 고갈까지 이르게 되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차의 에어백 기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기금수익률이 이렇게 9%까지 올라간다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동조정장치는 발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 세 은 위 원	기금수익률이 올라가면 자동조정장치 안 해도 기금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김 학 주 위 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조정장치를 하는 게 당연하죠.
정 세 은 위 원	아니. 참 나.
김 학 주 위 원	아니, 보세요. 차가 아무리 잘 달리고 사고가 안 날 것 같아도 에어백을 떼고 운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 세 은 위 원	아니 이렇게 9%까지 쭉 올라가면은, 50년 후 70년 후에 기금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 보험료 지급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아마 더 남을걸요?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왜 도입하냐구요.
주은선위원장	김학주 위원님 얘기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해도 이렇게 하면 작동이, 발동이 안 될 거니까,
김 학 주 위 원	그럼요.
주은선위원장	발동이 안 될 거니까 안 넣을 이유가 없다. 그럼 뜻 이신거죠? 발동을 안 할 거다.
김 학 주 위 원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에어백 없는 자동차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차가 아무리 튼튼해도 에어백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고요.
정 세 은 위 원	답을 하면 되는 거죠?
김 학 주 위 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5페이지에 연령대별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연령대별 경제성장률 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소득에 관한 건지, 고용에 관한 건지, 자산에 관한 경제성장률인지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젊은 세대 인구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 변화가 되면 연금문제 이외에도 다른 사회 보장 부담 문제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세 은 위 원	저기, 5페이지가 연령대별이 아니라 이게 연도예요. 연도.
김 학 주 위 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질 경제성장률이 20~30대에 1.9%나 되니까.

발언자	의결본(최종)
정 세 은 위 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김 학 주 위 원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 세 은 위 원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윤 석 명 위 원	이건 year라고요, year.
김 학 주 위 원	year인가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 세 은 위 원	이거는 잘못 해석하신 거.
주은선위원장	5차 재정추계 할 때 가중치로 썼던거고, 추계를 한 것이니까.
김 학 주 위 원	네 그래서 이제.
정 세 은 위 원	질문 마무리해 주시죠. 그럼.
김 학 주 위 원	네. 교수님께서서는 젊은 세대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미래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이 실제로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하시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종현 위원님의 미적립부채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메일로 받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쟁점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위원장 위원님. 저기 미적립부채 얘기는요. 다른 이슈니까 지금은 요 발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 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 석 명 위 원	신승룡 박사님이 미적립부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주은선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김학주 위원님 발언권 드리고, 그다음에 원종현 박사님 발언권 드린 바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 종 현 위 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잘 들리시죠? 저는 지금 신승룡 박사님이 대해서 아마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승룡 박사님이 사실 초반의 의견이,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낙관론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에서 소위 목표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떻게 낙관론에 맞춰서 설정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많은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을 전제할 때 모든 신승룡 박사님이 모든, 그 내용을 보면은 폐쇄형이라는,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 하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던 뭐 하든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있고요. 폐쇄형만을 전제로 해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분기 수익률, 아마 그건 방금 이제 질문

발언자	의결본(최종)
	<p>하신 것과도 저도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요. 이 손익분기 수익률이 15.5%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5%가 되려면요, 4.65년만 있으면 2배가 되고요. 한 가입기간 20년만 되면은 거의 8배, 9배,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을 지금 얻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연금 걱정은 전혀 없는 건데, 각 세대별로 손익분기에 대한 그것이 15.5%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p> <p>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개념으로 잡으셨던 것이 정상상태에 있어서의 지금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요번에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그 보험료율이 인상됐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은 저희가 40%에서 43%로 올라갔지만은, 보험료율 자체가 9%에서부터 13%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 보면 한 2030년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매년 한 현금으로 걷는 게 30조에서 50조씩 매년 더 걷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운용만 되면은 근본적으로 이 정상상태에서의 보험료 수익률이 높아지기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높게 잡으셨는지.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요 각각에 있어서 숫자들이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p>
주은선위원장	신 박사님, 대답하시고요. 예.
신 승룡 위원	<p>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폐쇄형 질문을 제가 잘 이해 못했고, 못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 보험료율 15.5%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제가 추계한 게 아니라, 일단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20.8%라는 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런 다음에 아까 근사치를 통해서 미적립부채 부담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6.3%이예요. 나머지가 손익분기 보험료율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그냥 한 보험료율만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킨다, 그러면 수익비는 1보다 무조건 떨어져요. 이게 미적립부채가 양수이면 무조건, 지금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수익비가 1 미만이라는 거. 그거를 약간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게 손익분기 보험료율이면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적립부채가 존재하는 순간 기금 운용수익률로 할인한 수익비는 1 미만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상태 보험료율보다 더 낮게 이렇게 15.5%가. 어쨌든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서 계산한 수치라고 말씀드리고요.</p> <p>왜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상승했느냐? 정상상태 보험료율은 지금 보험료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 운용수익률이 확정되고 그 소득대체율이 확정되면 그러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상상태 보험료율과 지금 앞으로의 보험료율 차이를 저희가 부족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정상상태 보험료율은 상승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계산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폐쇄형의 질문을 좀 다시 한 번만.</p>
원 중 현 위 원	<p>폐쇄형은 아까 맨 앞에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폐쇄형을 전제, 폐쇄형이라는 그 워딩이 돼 있거든요.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끼리에서의...</p>
신 승 룡 위 원	<p>미적립부채에 대한 정의가 3개가 있어서.</p>
원 중 현 위 원	<p>그다음에 일단 두 번째 문제. 손익분기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미적립부채에 대한 얘기는 아마 나중에 한 번은 지금 해야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저희가 미적립부채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해서 현재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1보다 작아진다는 전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운용수익률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저희가 수익률이 만약에 엄청나게 높아졌었다라고 한다면은 손익분기 수익률이라는 라든가 이 전제 자체가 되게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무조건 있다는 것만으로 1보다 작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거기서 15.5%라는 퍼센테이지는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라는 것이 일단 그렇고요.</p> <p>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정상상태에서는, 아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저는 좀 섞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퍼센테이지로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의 보험료율,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의 상승분을 수익률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게 금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서부터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 국고가 마치 더 들어가는 것처럼, 매년 20조, 30조, 40조씩 더 보험료 인상으로 더 들어가서 운영되는 비용이 더 커지는데, 이 자체가 그냥 소득대체율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다 해서 퍼센테이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에서 저는 좀 이것도 하나의 저는 제안인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말하는 이 숫자들이 보면은 각각의 출처가 다르고 각각의 그게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값을 가지고서 각자의 어떤 숫자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각각의 값들을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서로 좀 공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신 승 룡 위 원	<p>예. 일단 미적립부채 세 가지 정의 중에 이제 폐쇄집단방식, 미래발생이 없는 폐쇄집단방식이 있고, 미래발생이 있는 폐쇄집단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집단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약속</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된 부분과 아닌 부분 그거를 나눴을 때를 정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폐쇄형인 거고요. 다른 정의를 하든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변하는 거 아니고. 다양한 추계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사용한 겁니다.</p> <p>그리고 손익분기 보험료율 15.5%가 너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 추계가, 저는 추계한 적도 없고요. 그거는 단순한 기금 운용수익률이 4.5%로 가정돼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위원님처럼 6%를 가정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상상태 보험료율은 제가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소득대체율 오르면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오르는 건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예.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두 분 발제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수치들의 출처나 가정들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권을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일단 김신영 위원님하고 류재린 박사님, 그리고 박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또 손 드시지 않았나요? 손 드셨던 분?</p>
윤석명위원	<p>제가 손은 제가 먼저 들었어요.</p>
김신영위원	<p>먼저 주세요, 그러면.</p>
주은선위원장	<p>네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위원님, 김신영 위원님, 그리고 류재린 위원님, 박명호 위원장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p>
윤석명위원	<p>예. 제가 오늘은 발언을 최소화하려고 그랬는데 발언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질문만 30분을 할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있다. 지금 원종현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숫자 갖고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저 2023년도 5차 재정계산 또 21대 국회 특위 1기, 2기 자문위원회에서 숫자 가지고 굉장히 자기 숫자만 썼어요. 지난번 1차 회의 때 우리 주은선 공동위원장님이 제가 언급했던 수치를 갖고 그제 언제 수치냐 그랬는데, 올해 4월 이후에 추정된 수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발제자료 18쪽에 있어요. 11월 14일 제 발제자료 18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소득대체율 43%의 보험료 13%일 경우. 이게 기금 투자수익율은 상관없습니다. 4.5%나 5.5%나.</p> <p>4.5%일 때 2080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국민연금이 9.2%로 올라가고. 요새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이나 또 노동부 장관이 있죠. 말씀하시잖아요? 정년 연장하겠다고. 그래서 의무납입연령을 5년이 연장이 되면 이게 2080년에 국민연금만 보험료가 10.5%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정세은 교수님은 13쪽에서 12.1%로 지금 이미 다른 나라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거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코몬 펜션(Common pension)이라서 여기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기초연금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 회의록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다 합치면 이게 15%를 가뿐히 넘어간다. 이건 제 개인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받은 수치에 근거한 거예요. 원종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발 우리는 공식적인 수치를 갖고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뭐나면.</p>
주은선위원장	본론을 지금 시작...
윤석명위원	아니 이걸 요구를 했으니까 팩트 확인하는 거예요.
주은선위원장	<p>위원님 제가 발언권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발언 시간을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p>
윤석명위원	<p>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17쪽에 이제 누적적자 뭐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발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제 발언의) 본론도 못 들어갔으니까. 누적적자가,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도부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년연장하면 보험료 수입이 있으니까 연금재정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초등학생만도 못하는 이해 수준이에요. 의무납입연령이 1년 연장될 때마다 적자는 800조에서 한 천조가량 늘어납니다. 5년 연장하면 4천 조에서 5천조가 더 늘어나요. 이게 팩트예요. 다른 말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미적립부채에 대해서 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 국회 예산정책처의 김우림 박사가 지난 6월달에 발간한 책자에는, 아까 지금 폐쇄형, 개방형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방형으로 추정을 했을 때, 미적립부채가 있잖아요? 제도 개혁 전에는 2490조였는데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1820조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있고.</p>
주은선위원장	네, 위원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석명위원	아니요, 30초만 더 쓸게요.
주은선위원장	<p>아니요. 저기 다른,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이미 특별히 더 시간 많이 드렸거든요. 이제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p>
윤석명위원	<p>다른 위원들이 공식적 숫자를 안 쓰니까 얘기한 거예요. 제 말을 한 게 아니에요.</p>
주은선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신영위원	<p>정 교수님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발표자료 25페이지를 보고 제가 약간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항상 굉장히 이 방법론 쪽으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서 1인당 소득, 물려준 자본, 평균수명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원칙이 이 진술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애초에 비교할 수 없는 상황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을 너무나 짧은 문장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p> <p>두 번째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1인당 소득이 많다? 물려준 자본이 많다? 그다음에 오래 산다. 이것들이 과연 팩트인지 어설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제라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일종의 전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화 된 게 없습니다. 평균수명 말고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평균치인 거죠. 베리에이션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p> <p>세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근대 경제학의 개념으로 장유유서를 합리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어린 세대들이 이렇게, 우리도 열심히 일을 했고, 너희들도 앞으로 잘 살고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논리에 아주 근사한 근대 경제학의 개념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자기집에 자녀들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 세 줄 문장으로. 한번 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예. 정세은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정 세 은 위 원	<p>오늘 발표 시간이 25분이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를 안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많다.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가 누구나 좀 정의는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2050년 기금 고갈 이후의 세대다. 그런데 이제 이제 기금 고갈이 2070년으로 바뀌면 그럼 2070년 이후가 또 미래 세대냐? 아니면 기금 고갈이 2090년으로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화세대, 베이비부머세대, 그다음에 MZ세대. MZ세대가 2,30, 40이었다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미래 세대라는 게 애매한데요. 요 근거는 저희 재정추계에, 재정추계 2023년에 했던 5차 재정추계가 지금부터 70년 초까지 해서 2090년까지 한 것 같거든요? 2090년까지의 계산을 보면은 거기에 1인당 GDP가 나와요. 다음에 제가 제시를 할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1인당 재정추계에서 이 앞에 아까 5페이지에 있던 국가 GDP 추계한 거하고 같이 나오거든요.</p>
김 신 영 위 원	숫자 하나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을.
정 세 은 위 원	<p>그냥 팩트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왜 이걸 받아들이냐면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논의가 되니까. 왜냐하면 GDP는 거의 정체하는데 0%대로 증가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그다음에 미래 인구의 절반은 고령 인구여서 일을 안 해요. 나머지 인구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정상적이어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첫 번째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복지가, 어느 정도의 복지가 바람직하냐를 우리가 리그레이션 이렇게 할 때, 그중에 하나가 1인당 GDP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1인당 GDP가 작을 때에는 복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오케이 그래서.</p>
김신영 위원	<p>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 진술이 너무 거친 진술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p>
정세은 위원	<p>아니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p>
김신영 위원	<p>그래도 우리는 그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p>
주은선 위원장	<p>두 분 사이의 논쟁은 이제 여기서 좀 접어주시고요. 다른 분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재린 위원님.</p>
류재린 위원	<p>네 먼저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같은 현상이 또 해석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두 분께 다 질문드릴 건데요. 먼저 신승룡 박사님께는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우리 연금이 극단적으로 보장성이 강하다. 근데 그게 이제 자동조정장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보장성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장성의 개념이라는게 적절한 소득을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보장성이 약하다는 게 그냥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보장성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쓰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 궁금했고.</p> <p>두 번째는 이제 수익비를 제한하거나 급여를 삭감하거나, 어떤 일정 수준의 기금수익률이 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결국 수익비를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정세은 교수님 발제에도 있었듯이, 미래에는 급여 수준이 현행보다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데 급여를 깎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p> <p>세 번째는 이제 신규연금 분리의 장점이 이제 적어도 신연금은 재정안정화를 항구적으로 이루니까, 국고 투입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고 투입이 되면 그냥 분리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p> <p>그리고 정세은 교수님께는 이제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기금을</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적립배율 1배 정도 유지하는 게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기금은 그래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좀 입장을 이해하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p>
<p>신승룡위원</p>	<p>첫 번째 질문은 노후소득보장성, 이걸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정성으로 바꾸시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어느 정도 적정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고작해보야 이 수익비 1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 문제가 아닐까 해서 제가 정확한 답은 제가 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금 분리 없어도 되냐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동조정장치 있고, 그리고 국고 투입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18년간 개정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국민도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드립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정세은 위원님 바로 대답해 주시죠.</p>
<p>정세은위원</p>	<p>네. 이거는 저희가 기금을 쌓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금을 많이 쌓으려면은 지금 당장 저희가 기금을 쌓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 기금을 쌓을 돈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거는, 현재 많이 내면서 내수 부진 올 수 있고, 만약에 국고를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되고. 쌓고 싶은 만큼 어디선가 돈을 만들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현세대에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그걸 이렇게 쪽 쌓는다면은 나중에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 가지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그만큼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p> <p>이제 많이 쌓을 수 있냐? 그럼 지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가 이제 증세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한 5%, 여전히 적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국가의 수요가 재정 수요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인구의 빈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가가 돈을 써야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기금을 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기보다는 다른 복지 수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금을 쌓지 않고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들을 조금 조금</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씩 하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건 나중에 GDP의 한 6% 정도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기금은 최소한의 완충적인, 예비적인 수준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는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면 돼요. 단지 기금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내야 한다. 그거를 현재세대가 오케이 한다면 그냥 오케이.</p>
주은선위원장	<p>이제 박명호 공동위원장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p>저는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세은은 교수님 발제자료 13페이지에 혹시 띄워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의 GDP 대비율 추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OECD 자료하고 EU 27개 이게 평균화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마 OECD에서 2023년에 발표한 Pensions at a Glance에 있는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5년 버전이 나왔는데, 유럽 같은 경우 유럽 27개국 2050년이 12.3%가 아니라 10.9%로 나왔구요. 2060년 같은 경우에는 11.1%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비율로 보게 되면 1%에서 2% 정도 계속 차이가 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 2040년에서 2060년 경에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OECD 평균도 그렇고요.</p> <p>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2070년, 2080년, 2093년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복지 국가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이미 안정화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p> <p>그리고 말씀하실 때 고령화 수준이 우리가 40%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면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 수준이 이렇게 흘러가도 30%가 넘지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러면 70%의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우리는 60%의 국민들이 60% 조금 안 되는 국민들이, 이걸 다 부담해야 된다는. 여기서 오는 시각차가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p> <p>그 이 똑같은 자료를 볼 때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향후에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해서 KDI가 1% 포인트로, 1% 정도로 쪽 장기를 밀었는데, 경제성장이론에 보게 되면 장기 성장률이라는 거는 선진국들의 기술 발전 수준으로 다 수렴한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는 얘기를 해요. 근데 유럽형 국가들이, 27개국 저 12%, 10%, 11% 할 때는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을 0.8%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뽀족한 수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들보다 0.2%p나 높은 장기성장률을 향후에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GDP 자체가 낙관적이라고 그러면, 그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 있는 숫자들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EU 국가들하고 같은 중요소생산성 증가율로 0.8%로 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걸 갖다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p> <p>그다음에는 이제 15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그러니까 정세은 교수님이 바라는 것처럼 저도, 제가 아마 정세은 교수님보다 더 바랄 거예요. 9%가 아니라 15%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정도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왕고래가 포항 앞바다에 나왔다고 대통령께서 흥분해가지고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우리가 봤을 텐데, 그거 이상입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저런 정도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최근에 고용보험 기금이 코로나 시국 때 상당히 기금 운용수익이 되게, 기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당시에 운영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나면, 하루에 오면은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되는 대로 막 판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정전망을 하다 보면 기금이 쌓이고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과연 기금이 축적하는 시기의 수익률을 기금이 하락하는 시기의 수익률이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너무 낙관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어서 저 가정을 갖고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낙관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재정전망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위험도를 피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재정추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식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p>
주은선위원장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명호위원장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국고 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유럽형 국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학 교과서에도 보게 되면, 이정우 교수님이 2000년에 쓴 사회복지정책, 독일사회복지론 이런데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전체 수입의 4분의 1정도, 한 25%를 투입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법정연금보험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분들이 책에서 쓴 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주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할 사업이지만, 연금보험이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충당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논의가 분명히 있어요. 국고 투입을 할 때는 그거에 걸맞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없이 4분의 1이나 되는 국고 투입을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 자체는 상당히 난센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좋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학연금을 보게 되면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학연금 자체가 병원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간호사들이 엄청 많이...</p>
주은선위원장	위원장님, 이제.
박명호위원장	<p>30초만 쓰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사학연금 재정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져서 가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재정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p>
주은선위원장	예.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다음으로 김원섭 위원님.
정세은위원	저는...
주은선위원장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예 발제자이시니까.
정세은위원	<p>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국민연금 재정에 나쁠 것이다? 이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사학 하나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서 할 건 아니다. 사학연금은 사학연금의 구조가 있고 국민연금의 구조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기초연금에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걸 전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p> <p>그다음에 왜 다른 EU 국가들은 다 독일 같은 경우에 국가가 국고를 투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연금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수익을 덜 내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가지 정도 지적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유는 있다.</p> <p>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다음에 기금수익률 전망이, 제가 여기 이렇게 선형으로 쭉 그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4.5%는 너무 낮다. 그리고 지금의 많은분들은 한 5.5% 정도는 좀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어서, 이거는 다시 추계해볼 필요가 있다. 4.5%라고 하는 거를 먼 미래까지 이렇게 쭉 그려놓으니까 지금 국민연금 운용 전망이 너무 어둡게 나와 있는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p> <p>그다음에 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는 아까 윤석명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약간 현실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갈수록, 아까 뭐 경제성장률이 미래가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다? 저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생산성이라든가 자본축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화하는 과정을 넣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이게 너무 낙관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자 하면 엄청나게 싸우는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논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해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아니다라고</p>
주은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김원섭 위원님하고 박종상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고요. 두 분 발언 끝난 다음에 다시 발언 신청 받겠습니다.
김원섭위원	<p>우리 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의 어떤 불확실성,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세상이 하루 이틀 만에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2070년의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야기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앉아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정책을 다 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p> <p>두 번째는 이제 독일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정당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상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득 보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 안에서도 유족연금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거 상당히 복지, 그리고 크레딧이나, 그리고 안에 있는 최저연금보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수단이지 정책하곤 상당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수익률 계산할 때, 우리나라처럼 수입 전체하고 받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는 것 중에 받는 것 중에 80%만 되잖아요? 20%는 사회적으로 계산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도 A값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떤 사회적인 기여의 문제이고 유족연금도 있고. 그래서 자동조정장치 이거 말씀하시려면, 우리나라 연금에서 유족연금 떼내고 장애인 떼고 다 떼내야 돼요. 스웨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p> <p>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신승룡 위원님께서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연금이라는 게 그냥 수학적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안에 이제 모든 제도가 만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연금제도 자체가 사실은 세대 간의 어떤 재분배를 위해서 만든 거고.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지만, 왜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잘 사냐 못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래 세대에 우리도 잘 살 것이고 경제성장을 못하게 되면 못 살겠죠.</p> <p>우리 아버지가 지금 34년생인데, 우리 아버지 살 때는 전 세대고, 66년생인데 내가 전 세대, 우리 딸이 2002년생인 전 세대, 그거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 월급이 초봉이 500원을 받았어, 500원. 그리고 제가 받은 게 62만 원 받았단 말이죠. 우리 딸 같은 경우 연봉 3천 원 될 거라고, 최소한 아직 직장을 갈지 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뻥한 사실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그럼 못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p> <p>근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연금 추계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해볼 수는 있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불행하게도 그 3세대가 마치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 선진국에 있는 3세대가 같은 사회에 산다는, 같은 사회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했다 말야. 옛날세대는 전쟁도 있고 일제시대도 겪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았는데, 같은 세대에 사는데 자동으로 못 살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완해 주는 것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임금이 나왔는데, 우리 신승룡 위원께서는 앞에 있는 사람 다 떼고,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떼지 말고 모든 걸 다 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동수당도 떼고, 복지에 대한 모든 걸 다 빼버리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동행, 앞으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섞여 살지도 말고 우리는, 서로 보지 말고 살자. 근데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왜 또 세대끼리는 또 소득 보장을 소득 배분하려고 그러는지, 기왕 하는 거 딱딱딱 각자 도생해야지, 왜 자기 세대끼리는 재분배하고, 그건 안 하는지 그 논리가 좀 궁금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이거는 신 박사님, 신 위원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승룡위원	일단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난 거고, 세대 재분배는 국채 발행이라는 수

발언자	의결본(최종)
	단이 있습니다. 국회 과정을 통과해서 그거를 저희가 논의를 해서, 국민적 논의를 해서 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아무런 합의도 없이도 그냥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나는 그 이상한 형태입니다. 애초에 세대 간 재분배는 국채가 해야 된다.
김원섭위원	그건 위원님 생각이죠.
주은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 발언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보는데, 국민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신승룡위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은선위원장	그거는 발제자님, 위원님의 견해니까요. 잠깐만요. 대답을 다 하시는지요?
신승룡위원	그리고 기금 고갈, 지금 제가 뭐 연금 수급을 바꾸자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왜 세대 간, 세대 내에서 재분배하느냐? 저는 세대 재분배를 유지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기금 고갈이 되어 버리고 나서는 왜 그 세대가 그 이후의 세대보다 왜 덜 잘 살아야 하나? 지금은 기금 고갈 세대보다 더 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 앞뒤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논리이다 보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다음이 박종상 위원님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박종상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운용수익률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박명호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신 박사님과 정 교수님 그리고 어찌면 원 박사님도 관련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신 박사님께서 5.5%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셨고, 원 박사님이 아마 마음속으로 6% 정도 갖고 계신 것 같고, 정 교수님이 한 6.5%. 그리고 박명호 교수님은 한 9%에서 15%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명호위원장	저도.
박종상위원	아니 그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금 운용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라 GDP 성장률도 있고요, 실질임금성장률. 혹시 화면에 정 교수님의 5페이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걸 보시면 지금 이제 굉장히 장기로 보면 굉장히, 70년 동안을 평균을 놓고 보면은, 실질GDP성장률과 실질임금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잡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최근 20~30년 동안 기금 운용수익률이 한 6.5%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현재 한 20~30년 전 우리가 최근 실질경제성장률이 한 2~3%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발언자	의결본(최종)
	<p>동안 0.7%이 아니라 2%나 3% 숫자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코멘트 좀 드렸는데, 잠깐 질문을 드리면 4.5%라는 걸 되게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정 교수님 4.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재정추계하는 사람들이 4.5%라는 걸 쓰는지 한번 책보신 적 있습니까?</p>
정 세 은 위 원	제가 재정추계에 참석, 참가했었는데요.
박 중 상 위 원	그러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
정 세 은 위 원	저는 그때 좀 높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박 중 상 위 원	<p>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산군별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산.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잖아요? 낮은 걸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든 모형이라고 하는 금융경제학의 이제 원오브윈이라는 모형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고든 모형은 실질 GDP의 캡이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어떤 나라의 기업들이 잘 되는데 GDP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4.5%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20, 30년 동안 이제 잘 나왔다고, 그 4.5%라는 걸 버리고 좀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보다 뭔가 좀 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근거가 있으면 저 실질경제성장률도 저렇게 0.7% 같은 낮은 걸 쓰지 말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말씀드리고.</p> <p>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은 박명호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이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는 수익률이 분명히 다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이제 기금이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지 적자가 나온다는 얘기라서, 기금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위험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투자를 해야 사실 높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은 그냥 막 던져야 되는데, 시장 반대편에서는 특히 대체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서는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 이제 곧 팔겠구나.</p>
주은선위원장	이제 마무리.
박 중 상 위 원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기금수익률을, 뒤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그 사이에 원종현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원 종 현 위 원	예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마 방금 말씀하시면서 기금

발언자	의결본(최종)	
	<p>운용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장기 재정 전망할 때 4.5%가 나온 이유는 중기 자산 배분 안에 있어서의 마지막 끝점에 있어서의 자산 배분 군 간에 각 자산별 장기추계를 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방금 포인트로 잡으신 것이 이제 주식 부분을 잡지 않으셨습니까?</p> <p>근데 주식에서 고든 모형이 원오브린이 아니라, 고든 모형은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올드 모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고든 모형은 그 주식 수익률이 GDP 하고만 직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 나라에서의 주식을 활성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때려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4.5%라는 값을 액셉트 할 수 있는나라고 봤을 때, 사실은 4.5%가 어떻게 보면 대강 최근에 보편은 명목물가상승률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물가에서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껏해야 명목물가상승률에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저는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5%는 너무 낮다. 단지 이게 우리가 미래에는 어떻게 몇 퍼센트가 될지는, 사실은 그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모르죠. 그런데 몇 퍼센트 이게 될지 몰라도 최소한 4.5%에서 그래도 1% 정도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고.</p> <p>사실 그런 말들이 이번에 5차 재정계산에서도 그래서 하고, 이번에 연금개혁 이후에 5.5%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이제 그런 베이스가 먼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4.5%를 전제로 한 장기추계는 조금은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마무리 이제 해 주시죠. 됐죠? 그러면 그 사이에 발언권을 좀, 발언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박철언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이 아까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손들어주신 분이? 발언을 아직 안하셨던 분이 정해식 위원님하고 유희원 위원님. 예. 그리고 김도영 교수님, 김도영 위원님. 예. 송헌재 위원님. 그러면 먼저 박철언 위원님부터.	
박철언 위원	기금 논의로 한창 뜨거우신데 저는 미래 세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 정세은 위원님	

발언자	의결본(최종)	
	<p>25페이지의 슬라이드 보고 조금 놀랐는데, 김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GDP가 성장을 한다는 걸로 근거를 들어주신 지금 26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인데, 3, 4번은 불확실하고 1, 2번마저도 사실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GDP가 성장한다는 긍정적인 걸 이제 가정을 하더라도 1인당 GDP 증가하더라도, 노년 부양도 있고</p>	
정 세 은 위 원	<p>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바로 전에도.</p>	
박 철 언 위 원	<p>그 시간이 없어서.</p>	
정 세 은 위 원	<p>그걸 고려하지 않고 한 얘기. 요거 요거 없이.</p>	
박 철 언 위 원	<p>네 1인당 GDP가 증가하다보면 노년 부양비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령화가 됐을 때 미래 세대가 그러면 국민연금 외에도 과연 노년 복지에 대한 조세가 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저항이 없겠습니까? 과연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참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게 미래 세대는 현세대가 물려준 자본을 가지고 출발한다. 양의 자본만 상속합니까? 음의 자본도 상속합니다. 기후위기, 살인적인 주거비, 살인적인 교육비, 이런 거는 상속을 안 합니까?</p> <p>이걸 가지고 과연 현세대가 지금 양의 자본을 상속하니까 너희들이 양의 자본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해라. 바로 반박이 나오게 됩니다. 음의 자본은 안 물려주셨습니까? 과연 이거를 가지고 미래 세대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겠나.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점차 하락함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 걱정, 걱정하다. 그럼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이 국민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미래 세대가 과연 공평하면 국민연금 붓겠습니까? 조세 조항 발생합니다. 연금이라는 거를, 물론 우리는 지금 연금 논의를 하려고 모였지만, 연금이라는 건 다른 사회 모든 거랑 얽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항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제도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 거고, 미래 세대가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p> <p>그래서 아까 김신영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지금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노동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 그리고 내 자식들, 내 조카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반론이 있으시다면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정 세 은 위 원	<p>반론이 많은데, 지금 무슨 뭐 제가 막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도 음의 자산도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저희가 이제 장기재정전망 이런 거 다 다시 해야 되고. 저는 사회적가치 뭐 다 포함하는 거에 찬성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 연금재정 얘기할 때, 어떤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틀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 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4가지 불확실한 것들을 감안한 것 아니냐? 그거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정전망이 그런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도 놓지 않고 현재 상태가 쭉 지속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 재정전망이 나온 거거든요. 현재 상태가 쭉 지속이 된다고 하는 여러 조건들이, 그거 하에서 계산 자체가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많다고 나와요.</p> <p>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DP가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 인구 중에서 반토막은 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는 지금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일을 하는데 전</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채 GDP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거는 제가 가정을 새로 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재정전망이 저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는, 미래 세대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이 좀 걱정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미래 세대가 여기에 들겠냐?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는 저는 찬성해요. 저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낸 만큼 받아가라고 하니까. 낸 만큼 받아가라고 했을 때, 그 낸 만큼이 뭐냐에 그럼 미래의 수익률이 어떨 것이냐. 그럼 여기에서 지금 5.5%가 맞냐? 6.5%가 맞냐? 4.5%가 맞냐에서도.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낸 만큼 받아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4.5%를 댄으면은 좀 받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자꾸 여기에서 5.5%는 어렵고 미래의 4.5%가 될 거, 지금 4.5%일 것이다 이런 가정을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지난 몇 년간 6% 충분히 나왔고, 지금부터 이게 갑자기 그러면 6% 나던 게 이렇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p>
박종상 위원	장기 평균입니다. 장기 평균.
정세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는 거지
박종상 위원	GDP도 올리면 어떨까요?
정세은 위원	아니요. 또 그거 하려면 재정전망을 다시 다 해야 돼요. 그거를 1년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그때 했었고 수익률 전망도 그래도 한 4~5차례 모여가지고 송헌재 교수님하고 같이 했었던 그런, 그랬습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저 이제 김대영 위원님 말씀 주시면.
김학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미래 세대는 현세대가 물려준 자본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주은선위원장	김학주 위원님. 다음이 순서가 김대영 위원님이세요.
정세은 위원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공평성 얘기하고 왜 미래 세대에게, 아니. 미래 세대가 부담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 그렇게 걱정하시면 지금 현재 세대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주은선위원장	정세은 위원님.
정세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어차피 김대영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p>네 사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가방끈이 짧아서 좀 버릇없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특위에 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본 게 처음인데, 지난번에 박나리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세은 교수님 발제문 보면서,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계속 지적되는게 25페이지잖아요? 청년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의 발언들이 다 실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발제문은 그냥 제가 딱 보면서 25분 동안 들었을 때 72년생까지는 낸 만큼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받아가도 돼. 근데 너네는, 앞으로의 미래</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세대들은 더 소득도 많고, 물려준 자본도 가지고 출발하니까 더 내. 물가상승률이고 화폐 가치고 이런 건 다 저기 갖다 버리고 더 내. 고갈? 갖다 털어쓰면 되니까, 고갈 되잖아? 고갈되면 국고 투입하면 돼. 국가가 해주면 되잖아? 사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도 국가에서는 매년 100조씩 적자 나는데, 이거 복지 예산 갖다 쓰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고갈되는거, 국고 투입하는거, 너무 이런 것들로만 자꾸 들려서, 진짜 솔직하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저도 지금 연금을 제가 한 달에 60만원, 7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받을 거라는 기대가 안 들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근데도 어쨌든 간에 뭐 의무니까 내긴 내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딱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학자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청년들 현실에 가장 맞닿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회의장에서 저런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나라는, 굉장히 좀 개탄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났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답변이 있으시면.
정 세 은 위 원	<p>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이, 말을 할 수 없는 거다, 아니면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거는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세대 간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똑같이 내고 소득대체율을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그러냐. 사실 이미 그러한 세대 간 형평성, 그러한 정의라고 한다면 이미 깨진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3%, 70% 하던 거에서 점점 이렇게 되어 오고 있거든요.</p> <p>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하나 미래 세대가 우리가 기여를 주니까 너네 조금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세대 간 연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큰 얘기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자꾸 낸 만큼 받아야 한다? 뭐 이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낸 만큼 받아 가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똑같이 내고 받는 것이 형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낸 만큼 받아가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공정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것에 기대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p>
주은선위원장	다음 정해식 위원님.
정 해 식 위 원	예. 저는 일단. 저도 미래 세대가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9% 내다가 기금이 소진된

발언자	의결본(최종)
	<p>시점에서 갑자기 그 다음 세대한테 36% 내는 거는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9% 내고, 14% 내고, 15% 내고, 18% 내고, 순차적으로 올려 가는 과정들 사이 사이에서 세대 간의 역할을 조금씩 나눠 가지는 부분들의 면에서는, 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밖에 없고,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앞 세대가 3% 냈고, 6% 냈고, 9% 냈으니까 지금 우리 청년 세대도 9% 내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도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조금 더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수용하자, 수용을 해야만 무슨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올리자라든지, 그럼 좀 더 더 빨리 올릴 거냐, 아니면 좀 더 늦게 올릴 거냐 이런 논의가 되는 건데.</p> <p>지금 이제 서로 한 발짝도 앞으로 안 가려고 하게 되면, 그건 대화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약간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나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신승룡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제 제가 박사님의 발표자료는 여러 번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보험료율이라는 사실은 보험료수익 플러스 보험료가 그 외 급여지출을 항상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투자 수익이 이제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되는 특정한 시점에서 기금이 최대 14.7%, 당해 지출의 14.7%. 그러니까 대충 5% 수익률 나온다고 치고 보험료 없고 하면은 그게 안 나오는 값이 스테디스 스테이트 상태예요.</p> <p>이거 완전 적립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제도를 설계할 때 완전 적립 제도를 상상하지 않고 제도를, 글썽요. 또 이제 이걸 누구는 그렇게 상상을 했고 누구는 상상을 안 했다고 하면 좀 이제 또 답답한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완전 적립을 상상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는데, 갑자기 이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는 완전 적립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적립배율이 1배나 2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받을 시기까지는 줄 돈이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갑자기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포인트였는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미적립부채를 현재 시점에서 기금 투자수익률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 이제 기금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800조까지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미적립부채라는 게 이제 기금이 있어서 그 투자 수익이 계속 나온다고 할 때 가정인데, 미적립부채는 적립이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전환하면서 일시에 1700조를 넣을 거냐, 800조를 넣을 거냐 할 때. 수익률을 5.5%로 하면 떨어질 거고, 4.5%로 하면 1700조. 혹시 이렇게 가정하신 건지?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시에 돈을 넣어준다는 전제하에 투자수익률이, 이게 미적립부채 불륨을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바로 답변해주시면.</p>
<p>신승룡 위원</p>	<p>어 일단 보험료율 점진적으로 인상, 인상 뭐 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점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 그림을 6페이지에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빨리 인상해서 따라잡지 않으면 더 올라가서 불가능해집니다. 뭐 그런 상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적립 방식을 상상하지 않았다 아냐, 누구도 상상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구조 때문에 기금 고갈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다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적립, 그렇게 표현하시면 뭐 개인 차이마다 표현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금 고갈을 방지해야 된다. 그 유일한 방법이 미적립부채를 다 채우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 일시적으로 넣는 걸 감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연간 1.2%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식으로 아까 수치를 보여드린 겁니다. 빨리 넣을수록 국민 부담률은 줄어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같은 GDP 대비 1%를 넣더라도 오늘 넣는 게 더 많은 부분의 미적립부채가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앞에 몰아서 넣는 게 당연히 또 힘들긴 하니까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일정하게 GDP 대비 몇 %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넣을수록, 그러니까 일시불 할수록 기금은 더 높아지고, 균등하게 넣을수록, 장기적인, 아냐 기금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학적으로 아냐 그렇지 않을까.</p>
<p>윤석명 위원</p>	<p>저도 좀 신승룡 박사님 질문 좀 할 수 있을까요?</p>
<p>주은선위원장</p>	<p>지금 발언 순서가 짝 밀려 있거든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도형 위원님.</p>
<p>김도형 위원</p>	<p>네 저는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는데, 사실은 견해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보험료율을 인상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다음에 어느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 연령도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Common Ground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급 연령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동조정장치 얘기를 하면서 경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변수 같은 것에 연동한 급여삭감을 주로 상정을 하고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수급연령을 기대여명에 연동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동조정장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고려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더 길게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p> <p>마지막으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국고 투입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험료 인상을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장래 보험료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경제학에서 이제 초과부담 혹은 후생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게 세율의 제곱으로 커지게 돼 있어서,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될 텐데, 이것을 피하려면 어쨌든 국고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근데 국고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파이낸싱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p> <p>그래서 소비세로 유럽에서 하듯이, 소비세를 올림으로써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이나 노동과세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거기 파이낸싱 방식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승룡 박사님 KDI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거를 소비세로 파이낸싱 한다면은,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몇 %p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답변하셔야 되니까요. 먼저 정세은 위원님 답변하시고 신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정세은위원	이거는 목적세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국고니까 어떤 세목이든 상관없이 법인세, 소득세, 자산세, 소비세, 다 어느 통틀어서 올 수도 있는 건데요. 아까 목적세로 만들 때 소비세를 올려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역진적이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목적세로도 만들 수 있고, 전체적인 증세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소비세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소득세, 소비세 다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승룡위원	예. 그러니까 수급개시연령도 자동조정장치를 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하고요. 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저의 하고 싶은 말은 다 19쪽에 있는데, 지금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그걸 탑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자신이 없습니다. 이념 문제입니다. 누구는 더 보유세를 내야 되고, 누구는 더 소비세를 내야 되고,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소비세 내야 되고, 그래야 왜곡이 덜, 그런

발언자	의결본(최종)
	<p>애기가 있어서 좀 큰 자신은 없는데요. 소비세, 저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아보는 거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세, 연간 이제 GDP 대비 얼마나 하면 4.4%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율로 10% 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금 운용수익률이 5.5%. 표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5.5%일 때는 연간 GDP 대비 1.1%면 된다, 그게 이제 미적립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 부가가치세율 12.5%면 되지, 그러니까 2.5% 정도로 올리는 규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기금 운용수익률에 대해서는 표를 보면서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그러면 이 발언권 신청하신 분 중에 유희원 위원님. 네. 발언.
유희원 위원	<p>예 유희원입니다. 이것 저것 좀 많이 끄적여 봤는데 이제 순서가 뒤로 미루니까 다 날아가고 몇 개 안 남아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질문일 수도 있고 그냥 의견일 수도 있는데.</p> <p>일단 오늘 주제가 재정안정화 방안인데 재정안정화 방안은 저는 정세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이 급여 지출분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제 채워 나갈 것인지,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제도 내에 그런 모수 조정, 제도 내적인 조치만으로 채우자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필요보험료를 인상이나 이런 것 같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 이런 조치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p> <p>반면에 이제 그런 제도 내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어떤 제도 외적인 조치도 좀 같이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면, 오늘 두 분이 일관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맥락은 좀 다르지만 그런 국고 투입이나 다른 외적인 수단까지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모두 이제 국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신연금, 그러니까 신규연금 분리는 구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국고를 좀 넣는 방식이고, 반면에 이제 신연금에서는 이제 완전히 제도 내에서 이제 맞춰나가자라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신승룡 박사님께. 사실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p> <p>일단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결국은 박사님도 이 고민을 하시게 된 게 그 세대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후세대에게 조금 더 이제 감당 가능한 제도를 물려주는 방법으로 좀 찾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세대 간의 형평성 얘기할 때 결국은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지금 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이라는 거는 결국, 앞으로 부담해야 될 건 많아지고 점점,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이 문제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청년이나 미래 세대에게 조금 이로운 형태의 연금제도를 물려주고 싶다면, 결국은 부담을 줄여주거나 혜택을 늘려주는 이런 방식의 대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친구연금 분리 방식이 분리로 가는 게 과연 청년들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 혜택은 늘려주는 방식일지라는 차원에서 이런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p> <p>일단 급여 혜택 측면에서는 글썽요, 지금 제가 오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발제문에서는 이제 DC형은 아니라고 하신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본 보고서는 사실 좀 못 보고, 이슈포커스인가? 내셨던 자료상에서는 이제 완전 적립식의 DC형 제도를 좀 제안을 하셨어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좀 했는데.</p> <p>어쨌든 그런 자동조정장치도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DC형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DC는 아니더라도. 자동조정장치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만약에 급여에 연동을 한다면 급여를 확정시키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확정급여는 아니고 DC에 가까운 제도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DC로 전환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죠. 완전적립식, 민영화 체계로, 칠레 같은 사례도 있고, NDC로 간 국가들도 있고. 거기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이제 떨어졌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좀 저소득층, 이제 소득에 비례한 비례형 연금제도로 갈 거잖아요? 아마도 신연금도? 소득비례 방식으로 가게 될 거고, 세대 내에서 재분배를 넣는다고 하지만.</p> <p>그런 비례형 연금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취약계층이 이제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부담 측면에서도, 일단 전환비용 문제도 역시 609조든 1700조든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만약에 그 DC형으로 가면서 DC형 성격이 강화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에 다른 풍선 효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p> <p>정세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기초연금이나 국기초에 대해서 발생하는 재정소요분.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안 났을 때 발생하는 또 사적부양 책임이 또 늘어나죠. 그것마저 안 났을 때에 이제 그런 노인부양 책임을 비보장의 영역으로 남겨놔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심화돼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혜택과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인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p>
주은선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발언자	의결본(최종)
윤석명 위원	다 모아서 좀 답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행 방식이.
유희원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깐 저도 바로 들을게요.
신승룡 위원	예. 그 일단, 지금 현재 연금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기금 고갈입니다. 청년 위주가 아니라, 그 기금 고갈 이후의 세대를 걱정해서 지금 그걸 방지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규연금 분리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노후보장성이 강한 방식인데, 어느 정도 조정장치를 넣어서 이 기금 운용수익률에 연동을 시키냐, 개인마다 그 강도에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은 극단적으로 보장성이, 보장성이 아니라 안정성이 강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 디폴트는 지금 현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대 내에서, 재분배, 세대 내에서 재분배를 그렇게 유지하는 게 가능하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연금 분리에 포커스를 작성했습니다. 아무튼 적용 방식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여 어느 정도 이렇게 운용수익률에 연동을 시킬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주은선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송헌재 위원님.
송헌재 위원	치열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원종현 위원님께서 메일 주신 미적립부채 관련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 정세은 교수님 발표해 주신 발표자료 6페이지에 있는.
주은선위원장	송헌재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세요.
송헌재 위원	예. 기금 소진 후 GDP 대비 6% 적자, 이게 이제 쪽 쌓인 걸로 현재가치 한 것이 미적립.
주은선위원장	송 위원님 혹시 지금 미적립부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발제문 아니고?
송헌재 위원	약간 관련돼서 질문...
주은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헌재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신승룡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몰라서, 궁금해서 여쭙본 건데. 저도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뭐하러 유지하냐? 진짜 시리어스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이러면 뭐 하려고 계속 이거 난리 치냐? 그래서 저는 신승룡 박사님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신규연금 분리된다? 그러면 일단 구연금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여기서 짝 흡수가 되고 그러면 새로운 연금이 구축되는 거잖아요?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없애버렸는데 뭐 하러 또 연금을 새로 만드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연금제도를 또 만드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알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까 전

발언자	의결본(최종)
	<p>환비용이라고 했던 그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구연금, 지금의 연금, 이 시점에서 종료를 딱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부었던 사람들이 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받아야 되니까, 그 받아야 되는 총 연금액의 현재가치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p>
신승룡 위원	<p>아 예 맞습니다.</p>
송헌재 위원	<p>그러니까 그 돈을 그 국가가 이제 이렇게 천 얼마를 이제 지급하면 되는 거고, 그걸 그럼 당장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여기다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도래하면은 그때 주면 되는 거잖아요.</p>
신승룡 위원	<p>예. 그것도 가능합니다.</p>
송헌재 위원	<p>그래서 지금 청년세대의 이렇게 불만이, 지금 이제 왜 자꾸 우리한테만 부담을 씌우냐? 이제 이게 불만인 건데, 그게 다시 얘기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금을 분리하자는 안인데, 근데 그 연금도, 새롭게 생긴 연금도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신규연금을 또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아예 그런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도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p> <p>그러면 그게 신규연금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이 연금체계 안에서 뭔가 안정성을 찾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면서 또 보험료를 올리고 투입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그 나중에는 그 연금을 없애자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연금을 없애고 차라리, 아니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돈 벌었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 사 갖고 그냥 줘라. 그게 미래 세대에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p> <p>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이 신규연금 분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통합하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냥 쪽 간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유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안정성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보지 않은 느낌이 들게끔 해서, 이렇게 좀 다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추가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본 거예요.</p>
주은선위원장	<p>네, 답변하시죠.</p>
신승룡 위원	<p>예 몇 차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신규연금 아니, 만약에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투입이 있으면 신규연금분리는 크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신연금은 무조건 기대수익비 1이 만족하도록 해야 이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나 뭐 아무튼 뭐 세대 내, 세대 계좌들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미래 세대가 피해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인데, 필수조건은 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금 고갈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상태 보험료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네 답변을 하셨고요. 그 사이에 남찬섭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p>
남 찬 섭 위 원	<p>예.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못 오고 오늘 처음 왔습니다. 지금 기금, 우리가 이제 기금 규모 자체는 현재는 이제 제일, GDP 기준으로 제일 크지만, 이제 재정추계상으로는 소진되는 걸로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도 사실 필요한 것이고 한데. 근데 이제 아까 기금 소진 후에 부과방식 보험료율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부과방식 보험료율이라는 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주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서만 걷는다는 걸 전제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수급하는 것을 계속 앞으로 유지할 것인지는 사실, 그렇게는 사실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이 65세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퇴직제도가 생기면서, 유럽사람들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만들면서 이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65세라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연금을 주니까 65세가 노인연령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65세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해 만들어진 제도지 이게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변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쉽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정은 언젠가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재정추계 하는 것은 65세가 앞으로 70년 계속 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미래 세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세은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 재정계산에서, 여기 전체 기간 전체로 0.7% 경제성장률을 가정했을 때 그걸 그냥 적용한 것이거든요.</p> <p>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5차 재정계산 때 가정된 경제성장률이나 실질,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 투자수익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1인당 GDP도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좀 어폐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회가 빨리 변해서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도 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 보험료율은 그때 한 10% 정도였습니다. 보험료율. 10% 내지 한 15% 정도 냈는데. 지금 독일은 보다는 18%나 되거든요? 근데 60년대 보험료 10% 초반 때 냈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부당하다고 하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 세대 간의 역할을 나눠준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공적부담을 줄이게 되면 반드시 사적부담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부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금 안에서만 부담률이 어떻게 됐다고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고 투입 관련해서, 이</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제가 아까 박 위원장님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고 투입 관련해서 정세은 교수님이나 신 박사님, 국고 투입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좀 질문 드립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일단 답변하시죠.</p>
<p>신승룡위원</p>	<p>예 저 먼저. 부과방식 비용을, 정상상태 보험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로 저는 한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금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뭐 기금 고갈되고 나서 국고 투입이 가능하다면 지금도 가능해야 된다고 하고, 보험료율을 따져봤을 때 지금이나 그때랑 격차가 매우 크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저는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당 방식에 대해서 아까 김도형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고.</p>
<p>주은선위원장</p>	<p>아까 하신 발언으로 대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정세은위원</p>	<p>저는 국고 투입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국고 투입의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초기에 국가가 보험료 수입을 가지고 수익이 낮은 공적자금 운용을 해서 재정에 이미 손해를 많이 끼쳤다. 그리고 그 부담을 후손이 지금 계속 안고 있다. 또 하나는 산업화세대가, 그렇게 설계를 했지만 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 가고, 그분들은 이미 삭감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p> <p>그래서 그 이후, 그다음에 이제 먼 미래에는 점점 취약계층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들어오게 되어서. 국고 투입의 이유가, 보편은 저하고 신승룡 박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서 국고 투입을 미적립부채 부담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국고 투입을 해야 될 이유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앞선 세대가 부담하지 않았던 부분을 후손이 짊어줘야 하는 것이라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보니까 이 미적립부채 부담, 미래에 발생 내야 될 거여 가지고.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 국가가 빵꾸를 낸 그거는, 구멍을 낸 그거는, 이걸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p> <p>그다음에 정상상태 보험료율은 손익분기 보험료율 + 미적립부채 부담 보험료율, 이게 정의식이라고 하면은 A는 B, C가 이게 하나가 뭐죠? A를 더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A하고 B를 더하면 C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상상태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미적립부채를 빼고 나면은 손익부담 보험료율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냐면은, 이게 마치 손익분기 보험료율이라고 딱 들으면은, 낸 만큼 가져가는 보험료율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기금을 높이 짊어지기 위해서 이 필요한 보험료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의식이 맞느냐 이게 항등식이 맞느냐</p>

발언자	의결본(최종)
	냐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저기 잠시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몇 시까지 할 건지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논의를, 지금 5시 20분이 되고 있으니까 5시 반까지는 종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명위원	아까 발언 신청한 사람 발언을 하게는 해주셔야해요
주은선위원장	네 안내 말씀드렸고요. 윤석명 박사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석명위원	<p>예. 발언 한 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지금 저 시간이 없으니까 신승룡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에서 저는 우리가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승룡 박사님 그 어떤 발제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마이너하게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p> <p>여기 계신 분들이 국고 투입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국고 투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보험료 3% 내면서 소득대체율 70%를 11년 받아먹는 그 후과거거든요? 이 양반들 죽을 때까지 연금 안정적으로 주겠다고 우리가 국고 투입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한단 말이에요.</p> <p>많은 OECD 회원국가들이 국고 투입한다고 예를 드는데, 독일의 국고 투입은, 어제 우리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가, 2024년에 국고 투입, (전체 연간 연금지출액 중에서) 보험료 수입이 77%, 연방 보조금이 22.6%. (이처럼) 국고 투입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p> <p>그러니까 연금정책에 본인이 기여해서 받는 연금제도하고, 자기가 기여하지 못해서 받는 연금제도가 통합돼 있다 보니까 독일 같은데 이런 데, (이하 언급되는 데)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기초연금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p> <p>그런데 국고 투입을 무조건 너무 합리화하는 건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부양능력이 떨어지는 세대들 고통을 주면서, 앞선 세대, 혜택 많은 걸,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p> <p>그래서 국고 투입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비용이 많다고 저 신규연금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전환비용 쪽을 줄여주는 쪽으로 국고 투입한다고 그러면 저는 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지막 이제 소득재분배 기능은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근데 우리 유희원 박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18.3%를 부담하면서 소득비례 연금 소득대체율이 32%거든요? 우리가 훨씬 적게 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신규 제도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게 저는 서스테이너블 (sustainable)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p> <p>그래서 아까 굉장히 어떤 특정 계층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발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주고, 소득비례형으로 전환시키고,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주는) 소득 상한을 높여주면, 중간 이상 소득계층은 국민연금 통해서 연금액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같은 걸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면 저는 훨씬 모든 소득계층들이 지금보다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신승룡 위원	<p>네. 역시나 국고 투입을 어떻게, 그러니까 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도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료로 충당해도 되는 거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가 뭐 강력히 주장하는 건 아닌데 지금 있는 거니까, 거기서 시작하자라는 거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수정해 나갈 그럴 필요도 당연히 있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강한 의견은 없습니다. 같은 답변을, 국고 투입에 대한 답변을 이미 저기 했고요. 정세은 교수님이 정상상태 보험료율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치입니다. 그 기금이 평생 고갈, 나중에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것과 이익 이거 완전히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적립부채가 없을 때, 그러면 DC형이, 아 적립금이 없을 때 그러면 DC형이겠죠. 거기에서 조금만이라도 보험료율만 높아지면 기금은 발산하고, 조금이라도 보험료율이 더 내려가면 이렇게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위치여가지고 글썽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저기 의문을 가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금이 평생 발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상상태 보험료율 이어가지고, 그걸 향해 저희가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p>
주은선위원장	그러면은 정창률 위원님, 그 사이에 발언신청 하셨구요.
정창률 위원	<p>오늘 이 주제를 이제 한다고 들으면서 아 이제, 역시 이 주제에는 절대 동의가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던 주제고요. 당연히 굉장히 다른 가치라는, 가치가 굉장히 깊게 투영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생각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적연금제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입장에 따라 다르다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특히, 이제 민간보험 쪽에 있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완전 적립을 안 하니까 이걸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제도로 보일 수 있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요. 또 반면에,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팔레어 같은 학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학회에서 왜 너네는 그렇게 돈을 그렇게 몇 백 조씩 쌓아놓고 노인빈곤에 그걸 투입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돈을 쌓아놓는 것 자체가, 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 돈을 쌓아놓는 것에 대한 이제 모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p> <p>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당연히 여러 전문가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하는, 계속 확인하지만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좀 이제 앞으로 뭘 얘기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견은 있지만, 한 3~4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p> <p>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고 투입에 대해서, 일단은 두 발표자님은 어떤 방향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국고 투입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과연 국민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금 수익만으로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시스템, 현재 시스템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3의 재원을 우리가 고려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좀 필요할 수 있다. 거기에 물론 전문가들마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그게 하나가 있고.</p> <p>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차이점을 계속 확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상태에서 주로 논의해야 될, 이 재정개선 관련된 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계속 얘기했던 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었지만. 이걸 일단락, 물론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모수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그런 세부 주제를 도출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다음으로 배관표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배관표위원	<p>예. 저도 오늘 논의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추정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고에 대한 논의가 조금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는거 같습니다.</p> <p>국고 투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건지, 또는 그걸 어떻게 써야 그게 효과가 더 좋을지에 대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논의들을 앞으로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신 박사님께서 낙관론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신 거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낙관론에 대한 대비 정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p>제가 신 박사님한테 딱 하나 여쭙보고 싶은 거는, 낙관론에 대한 책임, 이 아래 부분에 또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리가 대안을 도출할 때, 앞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 박사님께서 19페이지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인가 없이 연금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어떻게 하게 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없는지 그것만 좀 부탁드립니다.</p>
신 승 룡 위 원	<p>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두에 뒀던 거는, 18년 동안 개혁이 없었다. 그런데 항상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만 어떻게 개혁이 됐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때 상황이 변하는데 적기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점점 정상상태 보험료율이 올라가서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 부분을 이제 시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회 인가 없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시간이 좀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오신 분 중에 발언 안하신 분 두 분 계신데요. 한 1분씩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박 나 리 위 원	<p>저 신 박사님한테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수익비를 1로 둔다고, 뒤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연금급여를 정할 때는 이제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게 되는데, 그걸 명목임금상승률, A값 증가율, 이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삼으신 거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투자수익률을 기반으로 그 수익비를 1로 맞추는 건지? 그러니까 수익비를 1로 맞춘다고 했을 때 그 할인율이나 그런 건 어떤 걸로 두신 건지.</p>
신 승 룡 위 원	<p>재정안정에서 제일 중요한 할인율은 기금 운용수익률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1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 그럴 때 임금상승률로 하면 1보다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p>
박 나 리 위 원	<p>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수익비 계산을 할 때 명목임금상승률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p>
신 승 룡 위 원	<p>둘 다 유지하는 건 좋습니다. 단지 재정이 안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 기준은 무조건 기금 운용수익률로 해야 기금이 고갈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수익률 위주로 재정안정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형평성이 있냐 없냐 이거 했을 때</p>

발언자	의결본(최종)
	임금상승률로 해도 다른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나 리 위 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조금씩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논의를 할 때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신 박사님께서서는 이 정상상태 보험률이라고 계속 언급해 주시고, 다른 분은 이제 완전적립 보험률이라고 사용을 해 주시는데, 저도 완전적립 보험료율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는 이제 입장인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정리할 시간은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은선위원장	예. 공동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수치와 출처와 용어와 등등에 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승 룡 위 원	정상상태 보험료율은 이제 보사용 보고서에서 제가 갖고 온 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정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 보 영 위 원	정말 송구스럽게도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그다지 없습니다.
주은선위원장	<p>네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출발을 하셨지만, 방안에 관해서는 아까 정창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몇 가지 수렴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국고 지원, 우리가 이제 재정안정 조치 얘기를 하면서, 크게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조치 얘기를 하는데요. 수입 확대 조치 관련해서는 이제 국고 지원에 관해서는, 두 분이 물론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고 지원 얘기해 주셨고요.</p> <p>또 이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보험료 부분도 같이 어쨌든 언급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수급개시연령 조정 문제는 이제 지출이나 수입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어쨌든 수급개시연령 문제, 조정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p> <p>다만, 이제 두 분의 입장이 좀 크게 갈렸던 부분은 지출 축소 조치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조정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금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상보다 급여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 거고요. 이제 정세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선을 그으면서 재정안정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오늘 논의는 마치도록 하고요.</p>
김 학 주 위 원	예. 제가 오늘은 발언을 최소화하려고 그랬는데 발언을 좀 많이

발언자	의결본(최종)
	<p>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질문만 30분을 할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있다. 지금 원종현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숫자 갖고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저 2023년도 5차 재정계산 또 21대 국회 특위 1기, 2기 자문위원회에서 숫자 가지고 굉장히 자기 숫자만 썼어요. 지난번 1차 회의 때 우리 주은선 공동위원장님이 제가 언급했던 수치를 갖고 그게 언제 수치냐 그랬는데, 올해 4월 이후에 추정된 수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발제자료 18쪽에 있어요. 11월 14일 제 발제자료 18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소득대체율 43%의 보험료 13%일 경우. 이게 기금 투자수익율은 상관없습니다. 4.5%나 5.5%나.</p> <p>4.5%일 때 2080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국민연금에 9.2%로 올라가고. 요새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이나 또 노동부 장관이 있죠. 말씀하시잖아요? 정년 연장하겠다고. 그래서 의무납입연령을 5년이 연장이 되면 이게 2080년에 국민연금만 보험료가 10.5%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정세은 교수님은 13쪽에서 12.1%로 지금 이미 다른 나라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코몬 펜션(Common pension)이라서 여기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기초연금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 회의록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다 합치면 이게 15%를 가뿐히 넘어간다. 이건 제 개인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받은 수치에 근거한 거예요. 원종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발 우리는 공식적인 수치를 갖고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뭐나면.</p>
주은선위원장	예예. 전체 메일로.
김학주위원	전체 메일로 미적립부채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알기로는 전달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은선위원장	피드백을 전달을 못 하겠라는건 무슨 얘기일까요?
김학주위원	<p>그러니까 그때 같이 링크들을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IMF라든지, Worldbank라든지, OECD 링크를 보내 주셨는데, 중요한 건 Worldbank, OECD나 IMF나 본인이 첨부하시는 첨부 근거들은 결국은 더 투명하게 제시하라는 얘기지 미적립부채를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p> <p>그런데 그것을 미적립부채 사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왜 참고자료로 제시하셨는데, 저는 그게 납득되지 않아서.</p>
주은선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계시니까.
윤석명위원	그전에 저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주은선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드리고 먼저.

발언자	의결본(최종)
윤석명 위원	관련된 거라서 그래요. 관련된 거라서.
주은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문 주시죠.
윤석명 위원	왜냐하면 원종현 위원님이 어제 각 자문위원들한테 미적립부채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미적립 부채 규모하고, 각 나라가 어디서 미적립부채를 사용하느냐 그 개념, 그다음에 국제계리사협회에서 왜 미적립부채 개념이 중요한지, 그 동영상 2개를 우리 자문위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테크니컬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전달이 안 됐어요. 어떤 쪽 하나는 전달이 되고 어떤 쪽 하나는 전달이 안 되는 지금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일단 원종현 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원종현 위원	<p>제가 보낸 이유는 원래는 그거 사실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요. 보낸 이유는 그때 제가 회의록을 이제 수정된 걸 받으면서 윤석명 위원님의 그 주장을 마치 복지부가 보내면서 복지부에 의견인냥 함께 첨부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명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미적립부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쪽의 주장을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의 의견이 복지부가 이제 그것을 주관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당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렇지 않은 다른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첨부해야만 하겠다고 저는 생각했었고요.</p> <p>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 미적립부채에 대한 개념이나 숫자가 무의미하다든가 아까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공적연금 부분에서 미적립부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미적립부채가 어떤 확정 값이라든가 어떤 정해진 값을 우리가 신앙처럼 믿고, 이것이 규모가 이만큼 되니까는 우리가 지금 매우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앞으로 이 미적립을 메꾸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립부채 값은 어떠한 기준, 어떠한 가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나와서 계산해 보는 건 충분히 참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그거는 인식은 하지만 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제가 첨부했던 이유는, 부채를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복지부 쪽에서 각 위원들에게 처음에 보낼 때, 회의록을 보낼 때, 첨부해서 윤석명 박사님의 그러니까 윤석명 위원님의 의견이 마치 복지부의 의견인냥.</p>
주은선위원장	원종현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윤석명 위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꼭 주세요.
김학주 위원	아니 저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할인율에 따라 부채가 극적으로 달라지니 쓰면 안 된다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할인율에 민감하다는 점은 모든 장기부채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발언자	의결본(최종)
	<p>저녁 뉴스에 나오는 GDP도 장기 추정치입니다.</p> <p>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할인율과 만기 가진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GDP를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복지 지출 규모도 쓰지 않는 것도 아니며, 국가 채무를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미적립부채도 동일한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p>
주은선위원장	네, 김학주 위원님.
원종현위원	<p>민간 부분에서는 그 회계의 법칙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 회계기준에 맞춰서 돼 있는데, 아직 공적연금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아직은 우리가 그걸 정의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p>
윤석명위원	<p>아니 그게 많이 다른지는 그렇고, 지금 분명히 깨끗하게 한번 말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원종현 위원님은 복지부가 임의로 제 의견을 서포팅(supporting)하기 위해서 그걸 보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 1차 회의 때 제가 여기서 위원들께서 저한테 어느 나라에서 그걸 하고 있냐고 계속 다그치셔 갖고, 그때 제가 찾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 칼럼도 있고 미국 OASDI 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p>
주은선위원장	위원님. 자 이제 논의를 좀 정리를 하도록.
윤석명위원	잠깐만요. 아니 중요한 거야 이거는 끊지 마세요. 그래서 회의록에.
주은선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윤석명위원	잠깐만요.
주은선위원장	논의를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명위원	제가 얘기만 하면 끊으려고 그래요?
주은선위원장	위원님, 논의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명위원	<p>회의록에 남습니다. 제가 발언하면서 이 자료를 사무처에서 위원님들한테 전해달라고 발언한 게 있어요. 회의록에. 근데 왜 복지부가 임의로 제출했다고 말을 하십니까?</p>
주은선위원장	<p>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아니라, 이 사안이 전달, 이 논의가, 이 자료가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나 자료나, 갖고 계신 자료들도 너무나 많고 알고 계신 것도 너무나 많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발제와 토의에 녹여서 전달을 하고, 메일링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그냥 자유롭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전체 메일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가 이번에는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회의록 작성 때문에, 회의록 작성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복지부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아마 회의록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위원의 요구는 받고 어떤 위원의 요구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우리가 방향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전체 메일링을 통해서 별도의 자료나 발언에, 별도의 자료나 주장을 전달하지 않는다. 최대한 회의 안에서 한다라고 합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방향은 이거고, 두 번째 방향은 회의 안에서 하되, 자료 유통이나 자료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메일을 통해서 수시로 하겠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p>
<p>원종현 위원</p>	<p>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 그겁니다. 오해나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내는 데 있어서 복지부가 보내는 것과, 저도 자료는 사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각 위원님들 아마 이메일을 달라고 해서 보내면, 그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발전적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미적립부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보내는데 굳이 저희는 복지부를 통해서 갈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이메일을 함께 공유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채널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저는 좀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복지부라든가 국회에서 괜히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 거기에 대해 제가.</p>
<p>주은선위원장</p>	<p>위원님, 원종현 위원님. 우리가 이 위원회가 이제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자문위원회인 만큼, 복지부나 국회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전체 채널링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국회를 통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대로 우리 다수결로 정해도 되겠습니까?</p>
<p>위원들</p>	<p>네.</p>
<p>주은선위원장</p>	<p>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p>원종현 위원</p>	<p>저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예. 첫 번째 방안대로 일체. 그런 식의 이제 자료나 주장은 메일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찬성하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6분, 7분, 8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좀 숫자 세주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저 한 명, 저 하나 플러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p>
<p>김태엽서기관</p>	<p>2안이 10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시 2안을.</p>
<p>주은선위원장</p>	<p>첫 번째 안?</p>
<p>정해식 위원</p>	<p>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면은 뭐 다수결로 해가지고 받기 싫은 자료도 받아야 되니까, 저는 받기 싫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쓰셨던 칼럼을, 우리가 회의장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두서없이 막 말을 길게 하다가 말을 다 못한 거를 그 칼럼을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낸 거거든요. 저는 그걸 받고 기분이 매우 별로였습니다. 아</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니 우리가 2시간을 회의를 하고 3시간을 회의하면 핵심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그냥 두서없이 내가 옛날에 97년에 읍져버로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시간 다 뺏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브로 자료를 보낸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에게는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받기 싫으시면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보내주는?</p>
정해식위원	<p>그런 식으로 정해 주셔도 좋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알겠습니다. 새로운 제3의 방안이네요. 일단 거수할 테니까 카운트 해 주시죠. 첫 번째 방안 보내지 맙시다. 매우 피곤합니다.</p>
김태엽서기관	<p>11명.</p>
주은선위원장	<p>11명이면은 예. 예. 두 번째 방안 한번 카운트 해 주시죠.</p>
김태엽서기관	<p>2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수입니다.</p>
(불특정)위원	<p>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게 하면.</p>
김원섭위원	<p>위원회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오갈 수 있죠. 오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 결정이나 자료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하려면 개인적인 개인적인...</p>
주은선위원장	<p>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p>
박명호위원장	<p>잠깐만요 잠깐만. 우리가 우리 윤석명 박사님이 전체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던 거는, 회의 석상에서 이리이러한 자료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전달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발언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위원회에서, 회의 석상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거든요.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 석상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어떤 시간 제한에서 충분히.</p>
정세은위원	<p>위원장님 근데 그때 다시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다 좋습니다. 보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보내겠습니다. 약간, 왜냐하면 저는 자각이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런 거는 보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논의 중에 이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약간 공식적으로 결정된 거 이런 것들까지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이메일 다 트고 해가지고, 그거야 뭐 그거를 어떻게 위원회에서 막겠습니까만, 지금처럼 이렇게 반반 딱 동수가 나온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받고 싶은 사람은 다 이것 저것 보내고 다 받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방금 박명호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회의 중에 추가적인 이런 자료는 보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p>

발언자	의결본(최종)
	그런 것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석명 위원	정세은 위원님, 그 발언은 있잖아요? 발제 내용조차도 통제를 받아서 발제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정세은 위원	통제를 아니.
윤석명 위원	자기가 발제한 내용에 보충 자료를 왜 그걸 안 받겠다는 거.
주은선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가 회의를 무한정 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세은 위원님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회의 중에 이런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내시고 싶은 부분은, 내 발언에 대해서 이걸 백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보내고자 한다라고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메일링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우시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좁혀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한 장 짜리.
박종상 위원	죄송한데, 그 논의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미적립 부채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원종현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그 부분을 제가 제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고 제가 반박하고 하는 거 그 정도는 괜찮겠죠?
주은선위원장	잠깐만요. 이제 그 부분은.
정세은 위원	그 부분은 원종현 박사님께 따로 물어보시죠.
박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신다는?
박종상 위원	개인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주은선위원장	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상 위원	감사합니다.
정세은 위원	그거를 이제 위원회로 하면 위원회 공식...
주은선위원장	위원회를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예. 이거는 다 합의를 봐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발언한 사람들의 동의가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박종상 위원	네 위원회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예. 그리고 이 한 장짜리 받으셨죠?
윤석명 위원	저는 못 받았습시다.
주은선위원장	못 받으시면 안 되는데요. 발제자료 사이에 끼어 있던데요? 두 개의 발제자료 사이에 끼어 있던데. 못 받으셨나요? 다 안 나눠드렸어요? 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랑 같이 사이좋게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논의에, 우리 이제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된 논의고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 안을 일단은 3월까지 마련을 했고요. 우리 연금특위가 이제 연장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3월까지만 일정을 잡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참석 인원이 위원장 제외 위원 중 20

발언자	의결본(최종)
	<p>명 중에 16명 이상이 참석, 대면으로 참석할 때 열리기 때문에, 각 일정별로 일단 참석 인원이 참석이 가능하신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p> <p>일단 12월 19일은 그때 다 참석하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월 9일 날 오후 2시, 회의 일정 가능하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불참하실 분, 참석이 불가능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한 분 알겠습니다.</p>
김태엽서기관	저쪽에 계십니다. 세 분.
주은선위원장	정창률... 세 분이세요?
김태엽서기관	정보영 위원님.
주은선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21일 2시입니다. 안 되시는 분? 박철언 위원님 한 분, 그리고 2월 13일 아, 두 분이구요. 2월 13일 불가능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2월 13일은?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하고요. 2월 27일 불가능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럼 3월 13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13일 날 참석 불가능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박철언 위원	위원장님 저 죄송한데 3월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다 학교나 학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강 후 일정이라서 3월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주은선위원장	근데 보통 통상 금요일들은 수업을 안 잡으셔서요.
정세은 위원	근데 가급적 안 잡아야죠. 뭐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춰요.
주은선위원장	네. 금요일은 피해 주시죠. 예. 3월 13일 금요일, 금요일 10시입니다. 이 3월 13일은 금요일 10시입니다. 다른 날하고 다르게. 불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3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너무 떨어져서 너무 떨어져서 아. 그러면 이 일정이 먼저 잡혔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안 잡으시라고 안 잡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성원은 대면 회의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김학주 위원	저기 궁금한게 있는데 왜 3월 13일은 금요일 오전 10시인가요?
박명호위원장	제 일정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주은선위원장	<p>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 마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화상 회의를 병행해서 이번처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p> <p>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인 주제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7회차 이후의 논의 주제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박명호 공동위원장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 주시는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p> <p>먼저 위원들이 논의 주제를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시면, 국회에서 취합해서 위원장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음 회의죠? 12월 19일 날 회의에서 논의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정리한 안건을 가지고 위원장이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할 안건을 정리한다라는 방식입니다.</p> <p>이 안건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주제를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금요일 정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시면 취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p> <p>네. 없으시면은 이 방식대로 따라서 진행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뒤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료 요구인데요.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 결과들이 메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이 이제 국회에 지금 제출을 하면, 바로 해당 부처에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중간에 좀 정리를 해서 뿌리는,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는 시점을 좀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p> <p>개별 위원들이 지금처럼 국회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바로바로 쏘아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일단 신청을 하시면, 국회에서 추천 위원의 정당별로 분류를 해서 양 공동위원장한테 다시 모아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각각 이제 각 정당의 추천 위원장이, 이것을 각각 모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비슷한 것들을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걸 다시 국회에 전달을 하면 국회에서 해당 부처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p> <p>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자료를 요청하는 시점이 지금처럼 바로 바로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회의 간격으로 봤을 때 약 2주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정상 보이시는 것처럼 회의 간격이 너무 떨어지는 좀 띄엄띄엄한 구간이 있는데, 이때에는 위원장끼리 협의를 해서 자료 요청 시점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따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p>위원장님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위원장들을 다 정산을 해서, 또 위원장들이 각 정당 추천 위원분들의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저희 위원장들끼리 만나서, 그냥 비슷한 자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원섭 교수님께서</p>

발언자	의결본(최종)
	요청한 거하고 제가 요청한 게 거의 같은데, 추계기간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 한 번 더 논의해가지고 유사한 것들은 같이 묶는 작업들이 있어야지 국회에 제출할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 한 번 더 그거는 저희가 수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자주 만나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근데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유사하다는건 누가 생각하는거?
박명호위원장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기간이니깐요.
김원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분이서 유사하니까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
주은선위원장	예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사하다고 해서 하나를 바로 날려버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잘 전달이 됐을까요? 예. 다소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추가로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혹시 논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정세은위원	있습니다.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회의록,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록 작성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나? 제가 다른 위원회 많이 다니는데, 이거를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위원회 하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저의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정세은 위원님께서서 우리 회의록 작성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논의를 안건으로 다룰지 제청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제청합니다.
윤석명위원	저도 제청합니다. 반대쪽입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일 밤을 꼬박 세웠어요.
주은선위원장	유튜브 생중계 건은 지난번 회의 자리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명위원	정리가 안 됐고, 추가 논의한다고 그랬어요.
주은선위원장	그러셨나요? 논의한다고 그랬어요?
윤석명위원	이것 보세요.
김학주위원	네, 추가 논의한다고 하셨어요.
주은선위원장	추가 논의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럼 유튜브 생중계 건에 대해서도 제청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제청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들	네, 제청합니다.
주은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박철언위원	저는 유튜브까지는 모르겠지만 속기록은 현행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연금특위 마무리 안 되고 청년세대

발언자	의결본(최종)
	의 반발이 나온 거는,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속기록이라도 남겨서 이 속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할 필요조차 없이 국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그 속기록이기 때문에 유튜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기록은 현행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죠.
(불특정)위원	네, 200% 동의합니다.
김학주위원	동의합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제안을 해 주셨던 정세은 위원님은 이거를 간결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철언위원	그러니까 그거 간결하게 하려면은 누군가 필연적으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요약해야 된다는거고, 그 과정에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속기록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섭위원	근데 이게 국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이 민간자문위원회이고,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자기 의견을, 물론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의견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요약본으로 하는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신영위원	원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뭐가 문제죠?
김원섭위원	그걸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 뭐 이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불특정)위원	각자 자기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해식위원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하나 하시죠. 그러니까, 원자료를 공개하고 그러는 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 원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제 어떤 상당히 이제 긴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박종상 위원님 개인이 유튜브에다가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우리 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거나 했을 때.
박종상위원	유튜브 안 합니다.
정해식위원	뭐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한다면 저는 뭐 전문 공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은위원	근데 진짜 우리가 이 회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의견은 이걸 당연히 얘기할 것도 아니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어느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정세은이 오늘 뭐 미래 세대는 훨씬 높은,,, 마땅하다. 너희들이 뭐 우리한테 받은 거 그. 근데 이제 맥락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거야 이제 다 다른 분들도 보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걸 보니까 이거는 구어체하고 문어체하고

발언자	의결본(최종)
	너무 달라서 읽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뭐 빵꾸 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대로 써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읽는 사람이 이게 회의록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여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근데요 선생님들? 저희가 다른 회의 많이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약간 정리를 해주지만, 얘기한 게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진짜 토시 하나 그대로 다 살려가지고, 우리가 그 회의록을 남겨야 될지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윤석명 위원	제 발언을 꼭 좀 들어주세요. 저는 1차 재정계산부터 5차 재정계산을 모두 참여했었고, 국회 특위 21대도 다 1, 2기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주은선 공동위원장님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심각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2023년 1월 말에 1기 특위 위원들 15명이 투표를 했어요. (제 안인) 소득대체를 40% 하고 보험료를 15%짜리하고, 남찬섭 위원이 제안했던 소득대체를 50%하고 보험료를 12% 또는 13% 안에서 투표를 했을 때, 10분이 제안을 서포트(support)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섯 분이 남찬섭...
정세은 위원	저기 이걸 길게 얘기할.
윤석명 위원	아니, 아니 왜 그래요? 얘기만 하면 끊으려고 그래요?
정세은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가. 우리가.
윤석명 위원	아니 정세은 교수님 말씀도 제가 지적할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들으세요.
정세은 위원	거수로, 그냥 길게할거나
윤석명 위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어요. 위원장께서, 위원장 사퇴하라고 제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정세은 위원	그러면 그건 다른 안건이에요.
윤석명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2023년 21대 국회 특위 1기에서 1월 말 투표 당시) 그 자리에 뒤에는, 지금 이스란 현 복지부 1차관께서 계셨습니다.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1차 회의록에 있습니다. 또 정세은 우리 위원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공론화위원회 때 5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인구 표본대로 따져 갖고 연금 더 주자는 그 표본들이 더 많이 있다고 제가 발제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이미 국회 특위 국회의원들에게도 (공론화위원회 담당자들께서)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정세은 위원	아니, 노인들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윤석명 위원	아니.
주은선위원장	이게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	이게 왜 논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은선위원장	사퇴 요구를 하시려면 하시고요. 논점은 이게 아니죠. 우리가 회

발언자	의결본(최종)
	의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가.
윤석명 위원	그럼 위원장님. 먼저 공동위원장 역할을 계속하시려면 지난번 발언 해명 좀 해주세요. 먼저.
주은선위원장	일단 논의에 우리의 초점은 회의록 작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이거를 정세은 위원님께서요 요약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제안을 하셨고요.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윤석명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이제 박철언 위원님은 그거를 계속 좀 상세하게, 속기록? 이 AI 녹취록이죠. 이 AI 녹취록에 준하는, 녹취록에 준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녹취록을 작성하자고 합의하지는 않았습디다. 녹취록을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선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절충안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 위원님.
남찬섭 위원	예. 저는 지난번 회의는 참석 못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생활보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같은 데에 참여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결정 권한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비록 민간인, 민간위원들이라 할지라도 회의 녹취록을 다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경우는.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 국민들에게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국회 민간자문위원이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사실은, 그다음에 국회가 결정할 텐데. 국회는 사실 그거를 생중계 한다든지 전부 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들이 저희를 뽑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자문위원이고 사실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국회를 통과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꼭 녹취록까지 해야 하나.
주은선위원장	네 일단은 두 가지의...
정세은 위원	저기 그럼 제가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판단이 안 돼서. 요약하게 되면 혹시 뭐 다 날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녹취록 아니, 한번 양쪽을 해서 저희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좀 비교를 하는.
박명호위원장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의결한 거는 지금의 방식대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해 가지고 결정이 나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 오늘 계셨던 분 중에 이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금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회의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다만 그거는 좀 불가능할 거예요. 그 녹취록이, AI 녹취록이 너무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정리된 상태로 위원들한테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돼서 오는 거를 위원 개

발언자	의결본(최종)
	개인들이 이걸 고치고 있는 거는 너무 낭비가 큰 거고요. 이 AI 녹취록을 좀, 그래도 한번 손을 보고 정리를 해서, 일단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 위원들이 좀 수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당일날 이걸 보내주셔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회의 당일날 보내주실 이유는 없고, 회의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좀 정리된 형태로 녹취록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명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면 돼요.
주은선위원장	아니요. 저기.
윤석명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안건이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처럼 AI 녹취록을 회의 끝나고 한 3시간 내로 보내주시고, 그걸 볼 사람 보고, 한 며칠 더 정리를 해서 부담이 적게 한 버전을 나중에 보내주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은선위원장	아니요. 그럴 필요가. 그렇게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	아니 그럼 다 열어 보지 마세요. 보기 싫은 사람은.
정세은 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하면 문제가 우선은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이게 외부로 좀 노출되고.
주은선위원장	우리 정리해 보조. 정리된 녹취록을 받으시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는 대부분이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할?
박나리 위원	잘 안 들렸어요.
주은선위원장	우리가 녹취록을, AI로 정리된 녹취록을 봤는데 지금처럼 엉망인 녹취록이 아니라.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 좀 정리된 정돈된 녹취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하십니까?
김학주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거 뭐 다수결 투표도 아니고, 아니면 전체 합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원장님이 지금 결정하실 수가 없고, 다음에 이석하신 분들 다 오셨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식 위원	저 하나 질문. 그러니까.
주은선위원장	이거는 다수결로.
정해식 위원	5~6시간 안에 보내는 거 하고, 한 이틀 정도 작업해서 보내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 작업하시는 쪽에서는 별 차이 없다. 어차피 그냥 클로바노트를 풀어서 그냥 보내는 거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희가 시간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명숙 국민연금정책과장	회의록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또 메일 보내는 거 가지고 조금 사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녹취록 말고, 어떤 내용을 요약하고 하는 것은 저희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 종전처럼 국회에서 하시는 게, 국회 행정실이라든가 위원장실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에게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발언자	의결본(최종)
	못한다는 그러한 그 비난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한 거는 그거를 국회에서 녹취록을, 회의록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 그거를 녹취를 한 거를 좀 정리하는 거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드려도 복지부가 따로 더 작업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단순 녹취한 걸 그냥 제공하겠다고 이제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을 더 드려도 서로 소용없으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저희가 선택할?
박명호 위원장	아니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언한 위원들조차도 이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식의 녹취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정돈이. 그런 면에서 정돈이. 내용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사실 확인이 맞게끔 누가 어떤 위원이 말씀한 것 자체는 좀 맞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섞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위원 간에 겹치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히 떨어져 발언한 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전명숙 국민연금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명료하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도 이거 몇 번 들으면서, 또 어떤 위원님들은 발음이 굉장히 또 박또박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안 그러시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시간 주시면.
주은선 위원장	네. 시간 그러면 시간을 좀 드리고, 기본적인 거는, 좀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뭐 이런 오류는 최대한 줄여서 보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명숙 국민연금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녹음된 거를 들으면서 이 내용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게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은선 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는 걸로. 그 발언 자체를 이렇게 크게 손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오류 없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엽 서기관	말씀을 하실 때, 땡땡땡 위원입니다 하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윤석명 위원	그러면 좋겠네.
김태엽 서기관	앞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박명호 위원장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발언 순서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은선 위원장	오늘은 그렇게 했어요.
김신영 위원	저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나 누구입니다 얘기하고 하는 게.
박명호 위원장	아 그래요? 까먹을까봐.
주은선 위원장	오늘은 그래도 지명을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런 혼선은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

발언자	의결본(최종)
	립니다. 자 오늘 논의할 것들을 거의 다 논의를 했는데요. 어 이 결로 이결로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